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제11호 | 2024 겨울

포커스 I 제1차 세계대전: 파괴적 전쟁의 유산

포커스 II 제1차 세계대전: 동아시아의 전환점

편집자의 글 전영옥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1호 기획편집위원 4

특별기고 근대국가와 제1차 세계대전 9
이정하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

아시아의 제1차 세계대전: ‘공유된’ 역사 22
쉬귀치(徐國琦) 홍콩대학(香港大學) 역사학과 교수

포커스 I 제1차 세계대전: 파괴적 전쟁의 유산 44
신호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베르사유조약과 모지 위의 실험실 58
신종훈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

단견과 오판, 예상 못 한 결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제1차 세계대전 도발과 제국의 해체 70
김지영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교수

포커스 II 제1차 세계대전: 동아시아의 전환점 83
장세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봉기의 분수령 97
조건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제1차 세계대전과 중국의 서양 인식 변화 107
이한결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체험! 역사현장 산둥반도에서 바라본 제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 117
안재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Contents

Message from the Planning Editor of Vol.11 Jeon, Young-wook 4

Guest Essays	Modern State in the First World War 9
	Lee, Jeong-ha
Focus I World War I: The Legacy of Destructive War	Asia's Great War: A Brief Shared History 22
	Xu, Guoqi
	World War I and Total War: A New Era of Warfare Begins 44
	Shin, Hyo-seung
Focus II World War I: A Turning Point in East Asia	The Treaty of Versailles and a Laboratory on the Graveyard 58
	Shin, Jong-hoon
	A Nearsightedness and Misjudgement, Unexpected Results: The Austro-Hungarian Monarchy's Provocation of World War I and the Dissolution of the Monarchy 70
Kim, Ji-young	
Experiencing Historical Sites	The First World War and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83
	Chang, Se-yun
	A Watershed Moment in the Rise and Fall of Japanese Imperialism 97
Cho, Geon	
Experiencing Historical Sites	The First World War and Change of Western Perception in China 107
	Lee, Han-gyul
Experiencing Historical Sites	The First World War and East Asia as Viewed from the Shandong Peninsula 117
	Ahn, Jae-ik

영국의 역사학자 홉스봄(Eric Hobsbawm)은 “20세기는 1914년에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1차 세계대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20세기의 특징이라고 이해하는 대부분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중요성에도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해는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식민지라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제1차 세계대전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더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군국주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양상은 다양한 전시폭력을 식민지민에게 가하는 것이었고, 이는 오늘날 역사 현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식민지 조선이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가 된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제1차 세계대전이 당시 식민지에 미친 파급력은 크고 넓지만, 결과적으로 3·1운동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은 한국의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전사(前史)로만 알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은 20세기라는 시공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접근이 한국 사회의 과거-현재-미래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앞으로 점점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상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포커스 11호는 발발 110주년을 맞은 제1차 세계대전의 유산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이 대전이 아시아에 일으킨 전환에 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이번 호에 수록된 총 9편의 글 모두 근대국가, 총력전, 제국주의, 식민지, 유럽, 아시아 등의 키워드를 새삼 강조합니다. 두 편의 「특별기고」는 모두 제1차 세계대전의 세계사적 영향에 대해 다룬다는 관점에서 연결되지만, 초점은 다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정하 연구원은 제1차 세계대

전이 근대의 모든 공간을 전쟁터로 삼는 총력전(total war)이었음을 강조하고, 이것이 국가 성격과 국가-사회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이 변화는 오로지 총력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과 맞게 되어 국가는 사회의 여러 요구를 조정해야 했으며, 국민은 희생을 담보로 주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콩대학교 쉬궈치(徐國琦) 교수는 ‘공유된 역사(shared history)’라는 개념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의 5개 국가에 미친 영향을 설명합니다. 이는 아시아인의 시선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어떤 현재성을 가지는지 검토하는 시도입니다. 필자 스스로 이 시도가 제1차 세계대전 역사에 아시아(인)을 온전히 포함하려는 노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을 두텁게 공유하여 앞으로 공유해야 하는 밝은 관계의 초석으로 삼자는 필자의 제언은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I」에 실린 3편의 글은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도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단 신호승 연구위원의 글은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다이제스트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촘촘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다양한 양상을 하나하나 소개하되, 이것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총력전으로 발전해 가는 논리적 고리로 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고리들이 하나씩 이어지면서 전쟁이 증폭되고, 결국 당대의 상상력을 아득히 넘어 총력전으로 향했다는 정리는 전쟁이 주는 역사적 교훈에 대해 돌아보게 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신중훈 교수의 글도 비슷한 관점을 공유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르사유체제가 가지는 한계에 관해 다루면서 강조하는 것은 전쟁의 교훈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던 역사의 참혹한 결말에 관한 것입니다. ‘묘지 위의 실험실’이라는 오싹한 표현이 암시하는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의 희생 위에서 수행되었던 평화체제가 어찌서 전체주

의로 귀결되었는지, 그 과정의 필연성을 파악하는 데에 훌륭한 나침반이 되는 글입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김지영 교수의 글은 전쟁을 향한 낙관적인 판단이 당시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흔히 제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일으킨 국지전에 여러 나라가 참전함으로써 확대된 전쟁으로 이해됩니다. 이 글은 이러한 이해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서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확전에 관한 단견이 한 제국의 경로에, 더 나아가 유럽 전역에 미친 스펙터클(spectacle)한 파급력에 대해 독자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3편의 글은 제1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세계사적 시야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굳이 이야기한다면 시선의 방향은 유럽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포커스Ⅱ」에 실린 3편의 글은 모두 아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들은 쉬귀치가 「특별기고」에서 제시한 ‘공유된 역사’를 더욱 구체화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장세윤 수석연구원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체제를 조선인이 어떻게 활용하고 ‘극복’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전부터 정부 수립의 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신민회 활동으로 추출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단순한 부산물로 치부될 수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기 위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환경 속에서 조선인의 대응이 능동적일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흥미롭게 제시합니다. 조건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제국주의가 처한 필연적인 역설에 대해 논합니다. 제국주의국가로서 일본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던 국제적 조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국이자 승전국이었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이 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이 결과적으

로 같은 대열에 있었던 미국과 영국을 ‘주적(主敵)’이라고 칭하게 되는 역설을 강조합니다. 일본의 의도가 어디까지나 자신의 점령지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은 동상이몽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가 본질적으로 제국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일본 군국주의의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이한결 강사는 제1차 세계대전만 염두에 두기보다 같은 시기 중국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과 서양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매개했다는 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당시 중국의 정치 상황과 연결하면서 군사력을 매개한다는 관성 속에서도 관계 설정의 방향을 역전시키고자 했다는 중국의 의도를 흥미롭게 포착합니다. 이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게 되었다는 결론은 오늘날 중국을 해석하는 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체험! 역사현장」에 수록된 재단 안재익 연구위원의 글은,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중국의 경험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한결의 글과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산둥반도의 칭다오(靑島)에 위치하는 ‘칭다오1차대전유적박물관(靑島一戰遺址博物館)’과 웨이하이(威海)에 위치하는 ‘1차대전중국인노동자기념관(一戰華工紀念館)’의 전시를 소개하고, 이 전시가 오늘날 중국의 역사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현장감 넘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중국의 공헌을 강조하고, 이 공헌에서 파생된 중국인의 힘이 ‘위대한 사회혁명운동’까지 이어진다는 전시의 구성은 과거의 전쟁이 어떻게 다시금 오늘날의 정치와 연결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적절한 사례일 것입니다.

이상 소개한 바와 같이 이번 호는 훌륭한 여러 필자들 덕분에 매우 흥미로

편집자의 글

운 글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제1차 세계대전을 두 개의 초점으로 바라보고자 한 이번 호의 시도가 독자에게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흥미롭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1호 기획편집위원
전영욱

근대국가와 제1차 세계대전

이정하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

1. 전쟁과 근대국가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수행한다 (Wars make nations, nations make wars)”라는 유명한 말처럼, 근대국가는 일종의 ‘전쟁기구’로 유럽사에 등장하였다. 고대나 중세와 달리, 대규모 그리고 장기간의 전쟁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독점이라는 폭력의 독점과 관료제를 통한 조세권의 독점 그리고 재정의 확립이 근대국가를 형성하였다. 영토와 인구에 대한 지배력은 행정력이라는 이름으로 강화되었다. 근대국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지배력(rule)’을 넘어, 특정 영토를 ‘통치(govern)’할 수 있는 행정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추출과 함께 구성원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확보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total war)이었다. 총

“

제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이었다.

총력전은 두 가지 ‘전체성’ 즉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이라는 의미에서
‘자원동원의 전체성’과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공간이 전쟁터가 되는 ‘전장의 전체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

력전은 두 가지 ‘전체성’ 즉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이라는 의미에서 ‘자원동원의 전체성’과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공간이 전쟁터가 되는 ‘전장의 전체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근대국가의 ‘전쟁기구’로서의 성격과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의 무제한 동원을 감안하면, 제1차 세계대전은 근대국가의 거대한 힘과 역할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전쟁이 정치체제에 미친 영향과 국가 기구의 제도적 구성과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특히 경제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전례 없는 개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루덴도르프(Erich Ludendorff)가 1935년에 출간한 『총력전(Der totale Krieg)』은, 총력전과 자원동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근대국가에 대한 경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국군 군수총감이었던 루덴도르프에게 독일 제국의 패배는 궁극적으로 자원동원 경쟁의 패배였다.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전쟁의 본질을 정치적 목적의 달성이라고 보았다면, 루덴도르프에게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총력전의 수행은 정치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루덴도르프가 보기에 미래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일에게 필요한 국가체제는 어떠한 방해없이 자원을 무제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정부 형태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군사 독재에 기반한 전체주의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모두 전쟁 수행에서

“

새로운 성격의 전쟁은 새로운 성격의 전쟁 수행 방식을 가져오며,
새로운 성격의 전쟁 수행 방식은 결국 국가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킨다.

”

근대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며, 특히 전후 계획경제와 권위주의적 국가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소련의 등장과 파시즘의 부상 등이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구약성서』의 괴수에 빗대어 근대국가를 논하였던 홉스(Thomas 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이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이제 완전히 구현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근대국가를 단지 제도적 측면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 국가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행위자와 집단이 상호 연관을 맺고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체다. 전쟁을 통해 근대국가가 형성되고 무소불위의 통치력을 가지게 된 듯 보이지만, 제1차 세계대전은 이전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총력전이었다. 총력전이라는 역사적 현상은 단순히 이전보다 장기간의, 대규모의, 혹은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현상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새로운 성격의 전쟁은 새로운 성격의 전쟁 수행 방식을 가져오며, 새로운 성격의 전쟁 수행 방식은 결국 국가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킨다. 전쟁은 언제나 이를 수행하는 근대국가의 모습과 성격에 영향을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속에서 근대국가는 새로운 성격의 총력전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역으로 사회는 주권의 합법성을 비판적으로 재정의하고 주권을 재구성하였다.

특별기고



홉스의 『리바이어던』 표지

출처: 위키피디아

2. 총력전과 근대국가: 폭력의 독점?

베버(Max Weber)는 근대국가를 ‘특정 영토 내에서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 사용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주장하는 공동체’로 정의한다. 따라서 합법적 강제력은 중앙집권적인 재정 기구의 지원을 받는 관료제와 함께 근대국가의 핵심이었다. 총력전인 제1차 세계대전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다. 즉 대규모 ‘무장한 대중’의 등장뿐만 아니라 자원 동원 과정에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이들을 무장시키면서 등장한 대규모 ‘무장한 대중’은 역설적으로 물리적 폭력의 국가 독점이 아니라 사회로의 이양을 가져왔다. 군사 동원의 정도는 교전국마다 크게 달랐지만, 15~49세 사이 남성 전체 인구의 거의 30%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 폭력 수단을 부여받은 병사들은 국가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거부했다. 예컨대 1917년 4월의 니벨공세(Nivelle Offensive) 개시 이후, 프랑스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항명사건은 총력전에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다. 4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1916년 12월 베르딩 전투(Battle of Verdun) 직후 프랑스군 총사령관 니벨(Robert G. Nivelle)은 또 다른 대규모 공세를 지시한다. 이 공세로 작전 개시 24시간 만에 10만 명 이상의 프랑스군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병사들은 국가와 군부를 심각하게 불신하게 된다. 프랑스 113개 보병사단 중 49개 사단의 공격 명령 거부를 시작으로 발생한 대규모 항명사건 속에서 무장한 대중은 시민-군인(citizen-soldier)이라는 정체성과 프랑스혁명에서 계승된 국민주권 개념을 내세워 국가에 도전했다.

동원에 내재된 사회적 역학을 고려하면 근대국가의 재정적 측면을 재

고할 필요도 있다. 1914년 교전국들의 재정 구조는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발달하지 않았으며, 전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수입의 일부만이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그 결과 전쟁 수행은 상당 부분 차입, 특히 국내 차입에 의존했으며, 이는 교전국 전시 수입의 70% 이상에 달했다. 그렇다고 하여 조세 수입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많은 교전국에서 ‘소득세’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혹은 전쟁 수행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던 점은 근대국가의 재정적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더욱 의미 있는 측면은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초과이득세’였다. 즉 제1차 세계대전은 시장과 생산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무제한의 이윤 추구에 제한을 가하게 되면서 전후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총력전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은 전례 없는 규모의 전투 병력을 동원하게 되면서 근대국가의 보급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1914년의 군대는 현대적 전쟁 수단 확보와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 사회와 산업계가 구축해 놓은 물류 네트워크와 경영 관리 기법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전쟁이 절정이었던 1916년 9월에만 매주 12만 8천 톤의 물자와 탄약이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갔다. 역사가 홉스봄(Eric Hobsbawm)이 언급했듯이, 총력전은 ‘의식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었으며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계만이 달성할 수 있는 업무’였다. 따라서 경제 동원의 과제는 단순히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교한 경영 관리의 문제였다. 자원은 필요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국가 경제를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의지에 걸맞은 그리고 근대국가의 관료제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경영 및 관리 기술과 조직력

특별기고



영국 육군장관 키치너의
모병 포스터
출처: 위키피디아

이 필요했다.

이는 단순히 물적 자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많은 인적 자원은 시민사회가 제공했다. 대규모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결된 그러나 상호 모순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첫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대규모 병력으로 동원할 것인가? 둘째, 대규모 병력의 존재가 곧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대규모 노동력의 유출을 의미한다면, 대규모 병력 유지에 필요한 대규모 물적 자원과 군수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엄격한 통제부터 유연한 협력관계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상황에 따

라 결정되었다. 군사적 요구와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근대국가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엘리트에 의존하였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미증유의 군사적 동원으로 이미 한계에 달한 행정 기구의 상태를 고려하면, 애국적 행동 규범 고양 등을 위한 ‘심리적 동원’ 즉 전선에 나가 있는 군인의 부양가족과 전쟁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은 각 지역에서 조직된 시민사회단체가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1916년 6월 ‘전쟁연금위원회(War Pensions Committee)’가 설립되기 전까지 각 지역에 설치된 ‘군인 및 수병 가족 협회(Soldiers’ & Sailors’ Families Association)’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했다. 총력전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제 근대국가는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는 공권력(public might)의 행사자가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해 역설적이게도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의 제공자로 변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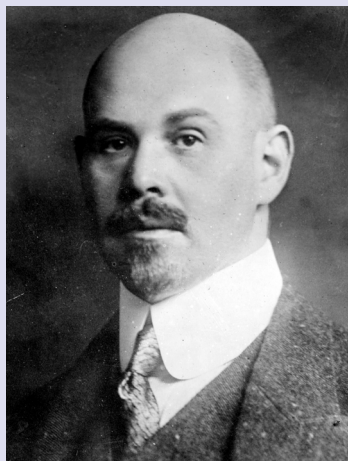
제1차 세계대전은 교전국 정치 체제의 차이점도 희석하였다. 국가 방위를 담당하고 있던 국가 기관들은 총력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실제로 총력전 수행은 근대국가의 거대한 역량을 보여준 것만큼이나, 근대국가의 한계와 시민사회의 성장 또한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전쟁은 국가, 기업,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촉발했으며, 관료와 기업인 간의 새로운 ‘조합주의적 협력(corporatist cooperation)’을 가져왔다. 즉 국가가 경영자 혹은 전문가 집단 등 특정 이익을 가진 집단의 대표들과 협력하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은 기업인이나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협력과 거래가 단지 영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독일 제국 ‘전쟁원자재국(War Raw Materials Office)’을 이끌었던

특별기고



알베르 토마

출처: 위키피디아



발터 라테나우

출처: 위키피디아

라테나우(Walther Rathenau)의 역할은 생산량 제고(提高)와 주요 전략물자 배급 등의 반시장적 정책을 결합하여 자원동원을 극대화하려는 근대국가의 시도를 잘 보여준다. 전기공학회사인 AEG의 회장이었던 라테나우는 자신의 경영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와 전쟁 수행의 군수 물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명되었는데, 같은 시기 프랑스 군수장관 토마(Albert Thomas)는 사회주의자라는 이력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군부와 기업가들과 협력하여 독일의 전시 경제와 유사한 정책을 수행했다. 총력전 수행은 정치 체제의 이념적 경직성을 뛰어넘고, 근대국가와 시민사회 모두가 각자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도록 ‘강요’하였다.

3. 협상과 거래 그리고 국민주권

제1차 세계대전과 총력전 수행은 근대국가의 권위와 그 합법성에 도전하고 이를 재정의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단순히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넘어, 전쟁 수행의 최고 조직자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경쟁하는 이해 집단들의 요구를 조정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물적 자원, 전문 지식, 그리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전시 동원에 필수적이었지만, 그 성공과 지속 가능성은 전쟁 수행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었고, 이는 역으로 전쟁 수행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곧 총력전을 수행하는 근대국가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근대국가의 권위와 총력전 수행 사이의 근본적 연관성이 드러난다.

‘영토 내 최고 권위’로 정의되는 주권은 ‘명령할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복종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1914~1918년 동안 국가의 권위와 합법성은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전쟁 수행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를 확인하면서 국가와 협상하고 거래하였다. 이러한 협상과 거래의 틀 속에서 국가도 궁극적으로는 여러 행위자 중 하나에 불과했다. 협상과 거래의 중요성은 필수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와 제도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시민사회의 대표들은 국가와 전쟁 수행 수단의 추출과 확보를 둘러싼 광범위한 논쟁을 벌였으며, 이러한 논쟁은 국가의 요구를 제한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협상과 거래 과정이었다. 심지어 군부가 주도하고 자원의 강압적인 동원과 통제경제를 주 내용으로 했던 독일 제국의 힌덴부르크 계획(Hindenburg Programme)마저도 노동계의 높아진 중요성

“

제1차 세계대전과 총력전 수행은 근대국가의
권위와 그 합법성에 도전하고 이를 재정의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단순히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을 넘어, 전쟁 수행의 최고
조직자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경쟁하는
이해 집단들의 요구를 조정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

과 의회 및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등으로 인해 제한을 받았다. 전쟁 수행의 합법성을 획득하기 위해, 이제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동의를 확보하는 국가의 능력이 중요해졌다. 1916년 11월, 당시 독일 제국 육군성 부장 그뢰너(Wilhelm Groener)가 토론했듯이, “이제 앞으로는 노동자와 사회의 반대에 맞서서는 결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상과 거래 과정은, 근대국가가 갈등을 통해서라도 전쟁 수행을 위한 동의를 획득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는 주권에 대한 독점을 성공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규모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은 근대국가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무장한 대중의 등장과 자원 동원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시민사회는 궁극적으로 근대국가를 제약했다. 이는 국가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군인과 민간인 모두의 희생으로 재정의된 ‘사회적 협약’을 유지할 역량에 달려 있었음을 의미한다. 총력전에 대한 대응 속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대중의 전쟁 수행 과정 참여는 시민권의 확대를 촉진했다. 이제 전쟁 수행과 민간 정치 사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투원과 민간인 모두는 점점 더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을 근대국가

특별기고



힌덴부르크(좌)와 루덴도르프(우)
(1916)

출처: 위키피디아

에 요구하게 된다. 총력전은 근대국가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새로운 성격의 주권개념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1914~1918년의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1917년의 혁명이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러시아를 넘어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렸고 유럽 전역에 새로운 국가들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워싱턴에서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참여했던 세계 여러나라에서 일어난 전후 사회운동은 기존의 정치적,

“

이제 전쟁 수행과 민간 정치 사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투원과 민간인 모두는
점점 더 국민주권을 근대국가에 요구하게 된다.
총력전은 근대국가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새로운 성격의 주권개념을 강화하였다.

”

인종적, 성별, 사회적 위계질서에 도전했다. 이러한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총력전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은 근대국가의 모습과 성격을 재정의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정하(李正夏, Lee, Jeong-ha)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

러시아 지역학 및 군사문제 연구자이며,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22년부터는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정학과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21세기 전쟁 양상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아시아의 제1차 세계대전 '공유된' 역사

쉬귀치(徐國琦) 홍콩대학(香港大學) 역사학과 교수

역사적인 제1차 세계대전은 오래전에 끝났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 치명적인 적이었던 나라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유럽연합(EU)을 설립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과 유산은 여전히 여러 가지 왜곡된 방식으로 아시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여전히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들이 조만간 아시아연합을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과 달리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일본은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와 전통을 깊이 공유해왔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유럽연합과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한 미션(mission impossible)이다.

논평가, 학자, 정치인들은 현재의 중일 관계를

1차 세계대전에 비유하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과 영국의 경쟁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면서, 국익과 외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긴밀한 무역관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여기서 중국은 독일에 비유되었다. 물론 중국은 이러한 비교에 불쾌감을 표명했다.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01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기간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4년은 1914년이 아니며, 더욱이 1894년에도 미치지 못한다. …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을 교훈으로 삼는 대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을 롤모델로 삼는 것이 어떨까?”¹라고 주장했다.

정치인들은 종종 역사를 왜곡하며, 나라마다 동일한 전쟁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은 아시아에서 국가적 열망과 발전, 대외관계, 아시아인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 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쟁이 아시아에 미친 영향과 아시아인의 기여에 대한 연구는 특히 아시아적 관점에서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쟁의 기억을 회복하고 아시아적 맥락에서 전쟁을 재평가하며, 전쟁이 가진 더 넓은 ‘세계적’ 의미와 중요성을 복원해 나아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다섯 국가를 중심으로, 아시아인의 다층적인 1차 세계대전 참여와 전쟁에 대한 시각을 초국가적 ‘공유된’ 역사(transnational shared history)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1 Edward Wong, “China’s Hard Line: ‘No Room for Compromise,’” *The New York Time*, March. 8, 2014.

1. 아시아의 '공유된' 역사, 제1차 세계대전

신흥 강대국 일본, 전쟁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한 중국, 영국의 식민지 인도, 프랑스의 식민지 베트남, 일본의 식민지 한국. 이 다섯 국가의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대응은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다섯 국가는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는 모두 근대 이전 중국의 제국적 영향력과 불교의 확산을 바탕으로 공통된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희미하지만 확실한 동질감을 형성해왔다. 인도와 중국은 때때로 간접적이긴 하지만 강력한 문화적 접촉을 유지했다. 불교는 고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었다. 중국의 많은 시, 희곡, 소설 그리고 민중과 엘리트 모두 불교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언어에는 인도 문화에서 번역된 표현이 풍부하게 반영되었다. 불교는 점차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중국 문화는 한국과 일본의 사회와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불교의 전래 외에도 일본은 문학, 전근대 정치 문화, 심지어 다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문화 지식을 수용하고 통합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지배층은 고전 한문으로 글을 썼고, 두 국가는 19세기 후반까지 중국의 조공국으로 남아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 다섯 국가를 더욱 실질적으로 상호 연결했다. 다섯 국가는 모두 전쟁을 통해 국가 발전이나 국제적 명성,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도모하려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또 하나의 통합적인 힘은 유럽 중심적 세계관이었다. 인도인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베트남인과 구별되지만 이 세계관은 이들을 모두 '유색인종'으로 간주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다섯 국가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전쟁이 어떤 방식으

“

아시아 5개국의 ‘공유된 여정’ 또는 ‘공유된 역사’의 본질과
전쟁이 이들 국가에 미친 집단적 영향을 강조할 것이다.

”

로 이들 국가의 20세기 자기 인식과 국제체제 인식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과 전 세계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촉발하였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은 아시아 5개국의 ‘공유된 여정’ 또는 ‘공유된 역사’의 본질과 전쟁이 이들 국가에 미친 집단적 영향을 강조할 것이다. ‘공유된 역사(shared history)’의 접근법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을 넘어 비국가적이고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제시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필자는 아시아인들 사이의 기대, 관찰, 고통과 좌절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감정은 유럽인도 어느 정도 공유했던 주제다. ‘공유된 경험(shared experiences)’이나 ‘과거의 만남(past encounters)’은 ‘공유된 여정(shared journey)’과는 다르다. ‘공유된 여정’은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도전 그리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목적지와 상호 이익을 전제한다. 비록 많은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 베트남인은 실제로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했고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많은 공통점을 공유했다.

아시아 전역에서 ‘공유된 역사’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타당하다. 전쟁 자체가 훗날 ‘세계대전’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서로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을 한데 모이게 했기 때문이다. 엘리트들은 전쟁과 국가 발전에 대한 경험을 국내외에서 공유하며 영감을 얻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소외된 사람들, 예컨대 중국, 인도, 베트남의 가난한 계층에

서 모집된 노동자와 보병은 종종 절박한 상황에서 외국의 장소와 문화를 직접 접촉한 경험을 공유했다. 각각의 국가마다 전쟁과 맺은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달랐지만, 그들 사이에는 집단적 여정(collective journey)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유사점이 있었던 것이다.

2. 유럽 전쟁은 아시아와 관련이 있었는가?

당시나 지금이나 유럽 전쟁이 아시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은 모두 거의 즉각적으로 유럽 전쟁에 참여했다. 실제 전투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도와 베트남만이 유럽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일본은 중국에서 독일과 전투를 벌였다.² 즉,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일본과 영국이 칭다오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군을 공격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전투가 중국 영토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중국정부는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전쟁에 집착하게 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군사 참관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1차 세계대전은 중국 사회·정치 엘리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최초의 주요 사건이었다. 중국인들의 세계관 변화와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중국이 세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과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과 관계를 맺은 역사는 깊이 공유되고 서로 연결된 역사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자국의 국가적, 국제적 이익을 위해 이 전쟁을 이용했다. 1차 세계대전이 일본에 미친 중요성을 완전히

2 일본은 전쟁 중 연합군에게 중요한 해군 지원을 제공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략적 참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이 일본의 참전에 핵심적 열쇠였다면, 일본의 의도에 대한 우려 역시 중국의 참전 노력을 이끌었다. 더욱이 중국과 일본의 전쟁 정책은 서로 얽혀 있었다. 중국과 일본 모두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차 세계대전을 이용했고, 전쟁은 20세기에 아시아의 두 주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지었다. 중국과 일본의 참전은 많은 고민과 신중한 계획, 장기적인 전략적 계산과 사고가 반영된 결과였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과 전쟁 중 그리고 전후 세계에서 경험은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유럽 전쟁에 대한 관심은 중국을 복종시키려는 야망과 관련이 있었으나, 중국의 참전, 특히 전후 평화회담 참여는 일본을 배제하려는 결단에서 비롯되었다.

중국과 일본 중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나머지 다른 하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일본의 진정한 초점은 중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독일이 점령했던 칭다오를 점령하자마자 중국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쟁의 노력을 전환했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 이 지역의 주요 강대국이 되었다. 일본은 중국에게서 할양받은 대만을 첫 식민지로 삼아 제국이 되었으며, 중국으로 하여금 전통적으로 중국의 조공국이었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두 번째 식민지를 획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로써 일본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서 주요 국제 군사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일본은 유럽의 식민주의 열강이 자국 내 전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이자 중국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칭다오전투는 전쟁을 중국으로 옮겨 왔고 중국인, 일본인, 인도

“

제1차 세계대전은 아시아 각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

인이 모두 참여했다.

이 전쟁은 일본의 국내 정치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쳤고 근대 일본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중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이 전쟁이 중국의 변화와 국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정책만큼 중국의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 외교 정책은 없었을 것이다. 중국 국민은 중국 최초의 주요한 독립적 외교 이니셔티브의 결실을 누리는 대신, 쓰라린 사회적 무질서, 정치적 혼란, 국가 붕괴를 맞보아야 했다. 참전을 둘러싼 분쟁은 파벌주의의 불씨를 키우고 군벌주의를 강화하며 중국을 내전의 길로 이끌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아시아 각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전쟁을 활용해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은 모두 민족 자결권과 국가 쇄신을 주장하는 새로운 운동의 출현을 경험했다. 한국인은 제1차 세계대전을 이용해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베트남인은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따르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추구하고자 했다. 전쟁이 한국의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인도, 일본, 베트남, 중국과는 달리 전쟁은 한반도 인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한국인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전쟁에 큰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전쟁은 한

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전쟁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가 구축 될 것이라는 윌슨(Thomas W. Wilson) 대통령의 약속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1918년 1월 윌슨 대통령의 14개항 연설과 그 이후의 선언을 접한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은 중국인이나 인도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 의미에 전율했다. 많은 한국의 민족주의자는 ‘윌슨의 순간(the Wilsonian moment)’을 한국에 전례 없는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인은 제1차 세계대전을 민족적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동료 아시아인과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인도, 베트남은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국과 일본은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아시아의 참여는 전쟁을 진정한 의미의 세계대전으로 만들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발전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전후 평화회담의 전망에 대한 아시아 참전국들의 기대감은 이 전쟁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식민지였던 프랑스령 베트남과 영국령 인도의 입장은 독립 또는 준독립 국가였던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과는 달랐다. 베트남의 경우,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전쟁이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역시 제한적이고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베트남인은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진화론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이는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추동했다.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은 유럽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이들 국가의 민중과 정치적 공동체가 겪은 전쟁의 경험은 여전히 국가 정체성과 20세기를 정의한 세계 질서 속에 위치를 형성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은 각국의 국가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고 동서양 문명의 융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과 일본은 국가 부흥과 국제적 위신이라는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쟁이 제공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고, 독일은 중국과 일본이 유럽 전쟁에 뛰어드는 데 편리한 촉매제가 되었다. 중국은 일본에 저항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지만 결국 적국인 일본과 같은 편에 서서 전쟁을 선포했다. 이 전쟁은 인도가 결국 독립과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다른 곳에서는 공산주의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인의 제1차 세계대전 참여와 이 전쟁의 아시아의 집단적 발전에 대한 기여는 완전한 국가 독립과 국제적 인정을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되었다. 전쟁과 그 여파의 결과로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적 자부심이 생겨났다. 이는 결국 일본인들이 서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길로 이어졌다. 전쟁은 국가 정체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전쟁을 통해 세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했고, 중국에서는 전쟁을 통해 근본적인 문화 및 정치 혁명과 새로운 국가 정체성에 대한 열망을 불러 일으켰다. 전쟁은 한국, 인도, 베트남에서도 독립에 대한 열망을 촉발했다. 이 국가들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전쟁에 물리적으로 참여했다.

3. 아시아의 제1차 세계대전과 전쟁에 대한 기여

인도, 베트남, 중국은 모두 유럽에 병력을 파견했다. 수십만 명의 아시아 남성이 연합군을 돕기 위해 서부 전선에서 복무하고 종종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들의 삶과 공헌은 대부분 무시되어 왔다. 그들

이 이 국가들의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열망과 활동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다. 약 14만 명의 중국인이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을 돕기 위해 서부 전선에 자원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프랑스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만 명을 노동자 또는 군인으로 프랑스에 파견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영국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0만 명을 노동자 또는 군인으로 파병했다. 베트남과 인도의 참전은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 아니라 대부분 제국에 편입된 결과로 발생한 것이었다. 당시 인도의 식민지 지배자는 처음에는 인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결국 전쟁은 주로 유럽 국가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은 곧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도의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국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인도의 참여는 인도인에게 국가 발전과 대외관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전쟁은 일부 인도인에게 외부 세계에 눈을 뜨게 했고, 세계 정치가 변화하고 그들의 이른바 ‘모국’이 대규모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 큰 기대를 품게 했다.

중국의 참전은 아마도 가장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중국인 노동자 파견 프로그램은 근대사에서 처음으로 중국정부가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의 문제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건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장과 후방 모두에서 벌어진 전면전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전투 병력과 기타 인적 자원이 소모되었다. 서쪽의 끔찍한 참호전에서 중국, 인도, 인도 차이나가 기여한 막대한 인적 자원은 전쟁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군인 및 지원 노동자에 대한 인도의 공헌은 엄청났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0만 명의 인도 남성이 군인 또는 노동자로 프랑스에 도착하여 식

민 지배자인 영국 아래 제국주의 모국 근처에서 일했다. 전쟁 경험은 인도인들에게 자국의 국가적 운명에 대한 이해를 형성했으며, 영국과 서구 문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인종 문제 역시 인도 노동자와 군인, 그리고 영국인의 관점을 통해 드러났다.

베트남의 참전과 전쟁이 궁극적으로 베트남 민족의 각성에 미친 영향도 매우 특별하다. 전쟁 기간 동안 현재의 베트남을 구성하는 킵킹, 코친차이나, 안남의 식민지에서는 10만 명에 가까운 군인과 노동자가 프랑스군과 함께 독일군에 맞서 싸웠다. 이들의 공헌과 경험은 식민지였던 조국의 역사와 전망, 독립을 향한 공동의 꿈에 대한 집단적 사고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호찌민(胡志明)과 같은 인물과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들의 반응, 그리고 인도차이나 민족주의의 대두와 전쟁이 식민지 베트남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인에게 프랑스로 향하는 여정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배멀미, 질병, 열악한 환경, 형편없는 음식 등이 주요 불만사항이었다. 그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두 나라 모두를 지원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인도인, 베트남인 모두 프랑스에서 유럽의 인종차별에 고통받았다. 고난과 인종차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은 유럽에서 서양인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경험을 통해 동양과 서양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대부분의 아시아인은 1차 세계대전을 단순히 백인의 전쟁, 유럽인의 전쟁, 서구 국가 간의 전쟁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전쟁과 그 여파로 인해 아시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인도인, 중국인, 일본인은 모두 아시아와 서양,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 간의 관계를 재고하고 전쟁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전쟁과 그 파괴는 서구 문명의 도덕적 가치를 실추시켰고, 파리강화회의에서 일어난 일은 서구 열강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기대와 존경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다. 또한 아시아인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이 미친 문화적 영향과 문명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는 전쟁에 대한 아시아인의 공헌을 잊어버린 듯하다. 인도 학자 산타누 다스(Santanu Das)가 최근 “군인과 노동자를 포함한 100만 명 이상의 인도 남성들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기여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문화적 기억상실증이 있다”라고 선언한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³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 하기하라 노부토시(萩原延壽)도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며 “제1차 세계대전은 20세기를 여는 사건이었지만 일본은 1945년까지 외부에 머물러 있었다”⁴라고 지적했다. 한국, 중국, 베트남의 전쟁에 대한 기억 역시 희박하고 고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도 너무 적다.

- 3 Santanu Das, 2011, “Imperialism, nationalism and the First World War in India,” In Jennifer D. Keene & Michael S. Neiberg (eds.), *Finding Common Ground: New Directions in First World War Studies*, Leiden: Brill, p.85; Santanu Das, “Ardour and Anxiety: Politics and Literature in the Indian Home Front,” *ibid.*, p.341; Vedica Kant, 2014, *India and the First World War: “If I Die Here, Who Will Remember Me?”*, New Delhi: Lustre Press/Roli Books.
- 4 Hagihara Nobutoshi, 1985, “What Japan Means to the Twentieth Century,” In Hagihara Nobutoshi, Akira Iriye, Georges Nivat & Philip Windsor (eds.), *Experiencing the Twentieth Century*,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p.20. See also Tadashi Nakatani, “What Peace meant to Japan: The Changeover at Paris in 1919,” In Toshiro Minohara, Tze-ki Hon & Evan Dawley (eds.), pp.171-172.

4. 제1차 세계대전과 아시아의 거대한 변화

아시아의 5개국은 전쟁에 대한 치솟는 기대와 그 여파로 인한 굴욕적인 실망도 공유했다. 전후 평화회의에 대한 기대와 좌절, 실망은 놀라운 집단적 경험이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 연구를 시도한 학자는 거의 없었다. 5개국 모두 윌슨의 14개항 연설에서 제시된 새로운 세계 질서에 열광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중국, 인도, 한국, 베트남은 국가 운명에 대해 동등한 발언권을 얻기를 희망했다. 일본은 파리강화회의가 아시아의 지배적 강대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들의 오랜 열망을 실현하고 최근에 얻은 중국에 대한 그들의 이해관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더 중요한 것은 서구 열강이 마침내 일본을 완전한 동등한 국가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랐다는 점이다. 첫 번째 야망은 대체로 성공했지만,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학생, 지식인, 사업가, 외교관의 격렬한 항의에 모욕을 당했고 두 번째 야망은 크게 실망스러웠다.

5개국의 엘리트들은 윌슨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청사진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는 전후 세계에서 아시아의 위치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논쟁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파리평화협상에 대한 공동의 실망감은 아시아와 서방과의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들 국가는 독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특히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중국과 일본 모두 1차 세계대전을 큰 기회로 여겼으나 두 나라 모두 전후 평화회의에 실망했다. 일본이 조약 협상에서 제안한 인종 평등 조항의 거부는 국제연맹의 지속적인 유럽 중심적 편향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에서의 영미 연대 강화, 1924년 미국 외국인 이민

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일본의 환멸감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⁵ 이 조항에 대한 서방의 반응은 일본이 여전히 서구 국가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일본은 백인 강대국 클럽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2등급의 지위를 공유했다. 이러한 환멸감은 이후 일본의 독자 노선 정책과 대중국 팽창주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국가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중국인은 19세기 세계 질서가 끔찍하게 잘못되었고 불공정하며 적대적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일본은 독일을 본받겠다는 특별한 결심으로 서구 문명의 물질적 진보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인 스스로를 ‘동양의 진보적 선구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과 새로운 세계 질서로 인해 일본은 잘못된 모델을 따랐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 결국 독일은 이제 비난 받는 패전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외교를 시도했으나, 그것이 실패하자 이상화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군국주의와 팽창주의로 전환했다.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의 인종 평등 조항을 처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파리에서 거둔 승리를 만감이 교차하는 감정으로 맞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일본은 평화회의에서 5대 강국 중 하나였지만 전후 세계 질서에서 법적 인종 평등에 대한 일본의 제안은 노골적으로 거부되었고 심지어 무시당했다. 일본 대표단이 귀국하자 군중은 이 조항의 실패에 대해 비판하며 항의했다. 그럼에도 일본인은 일본과 한국에서 한국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취급하는 데는 아

5 Naoko Shimazu, 2009, *Japan, Race and Equality: The Racial Equality Proposal of 1919*, London: Routledge, p.171.

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았다. 때문에 그 문제는 매우 복잡한 것이었다. 인종 문제가 일본인과 동료 아시아인 사이에 공유된 아픈 역사인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모두 유럽에 있을 때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본국에서 식민지배를 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제적인 인종 평등을 증진하는 것과 영토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일본은 후자를 선택했다. 전자는 일본 엘리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전후 세계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었기에 파리강화회의에서 중국의 실망은 훨씬 더 깊었다. 중국은 1915년부터 평화회담을 준비했다. 약소국이자 존중받지 못하는 국가가 열강과의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독일에 공식 선전포고를 하고 유럽에 대규모 중국 노동자 군단을 보내 연합군을 지원한 덕분에 평화회의에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5석을 차지한 반면 중국은 2석을 차지한 3순위 국가에 불과했다.

중국의 20세기는 1895~1919년에 이르는 넓은 의미의 제1차 세계대전 시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참전은 국제화를 향한 중국의 긴 여정의 시작을 상징하며 중국을 하나의 민족국가로서 세계로 인도하였다. 중국의 참전은 또한 중국을 20세기의 더 큰 세계사 속으로 다시 끌어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국은 여전히 새로운 국가 정체성과 “중국이란 무엇이며 중국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그렇다. 1차 세계대전과 5·4운동 당시 중국인은 ‘민주’와 ‘과학’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오늘날의 중국은 여전히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자유를 향한 중국

인의 외침은 이른 시기의 광범위한 정치운동과 여론의 부상에 비해 훨씬 더 약해진 상태다. 중국의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정치적 혁명은 중국이 1차 세계대전의 참여로 세계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추진력과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발생했다. 전쟁은 기존 국제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세계 질서의 도래를 알렸고, 이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에 불을 지폈다. 신생 공화국의 약점과 국내의 정치적 혼란은 국제체제에 진입하고 변화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다. 전쟁은 패배와 승리를 가져왔다. 중국은 승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일본은 승전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그 이득은 향후 파멸의 도화선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은 19세기 세계체제의 종말을 가져왔고, 세계 정세가 전반적으로 재편될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받은 아시아인은 1차 세계대전이 유럽의 도덕적 타락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전후 세계체제는 확고한 열강을 몰아낼 수 없었고 전쟁 직후에는 집단적 실망감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은 전후 합의가 아시아의 지배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중국에서 발전시킨 이익을 인정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일본 지도자들은 “자랑스럽고 자신감 넘치고 부유한 유럽이 산산조각이 났으니” 이제 서구 열강이 일본을 동등한 존재로 봐주기를 기대했다.⁶ 물론 중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본이 빼앗아 가지려 했던 것을 되찾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중국은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동등한 일원으로 합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서구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대신 사회주의 진영에 합류하

6 Margaret MacMillan, 2002, *Paris 1919: Six Months that Changed the World*, New York: Random House, xxv.

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발전은 또 다른 참전국인 러시아가 전쟁에서 큰 손실을 입고 혁명을 일으켜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한 이후의 결과이기도 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중국을 희생시켜 세계 강대국이 되었으나, 파리강화회의에서 서구 열강과 평등을 이루지 못하자 결국 중국을 침략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중국은 또다시 희생양이 되었다.

이 전쟁으로 일본은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전후 세계 질서는 일본인이 겪은 부당함과 열등감에 대한 두려움을 증대시켰다. 일본은 인종 평등 구상의 실패와 제국주의 열망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난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마지막 모순은 패배와 승리 사이의 대립이었다. 연합 승전국의 충실한 편에 섰던 중국은 패전국 중 하나로 취급받았고, 승전국으로서 일본이 얻은 이득은 결국 또 다른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파괴하는 씨앗이 되었다. 모든 행위자와 그들이 공유한 경험을 인정하는 완전한 이야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식민지국가였던 한국, 인도, 베트남에게 전쟁의 정치적 반향은 독립과 근대 민족주의를 향한 험난한 여정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세 국가 모두 전쟁이 유럽에 가져온 불신을 기회로 삼아 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인, 인도인, 베트남인 모두 전쟁과 전후 평화 회담을 국가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으며, 전후 세계에 대해 큰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결국 모두 깊은 환멸을 느끼면서 더욱 강력한 무기를 찾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월슨의 민족자결사상은 식민지였던 한국, 인도, 베트남에 큰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1919년, 응웬 아이 꾸옥(‘조국을 사랑하는 응웬’이라는 뜻)이 파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식민지 출신의 이 무명의 베트남인은 훗날 호찌민이

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다. 호찌민은 파리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1919년 9월에는 최근 인도차이나 총독으로 복귀한 알베르 사로(Albert Sarraut)를 만나기도 했다. 호찌민이 1919년에 가졌던 많은 아이디어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한국인 민족주의자와의 접촉을 통해 영감을 얻었으며, 특히 한국의 독립운동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믿어진다.⁷ 세계대전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한국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았지만 전후 평화회의와 관련하여 제시된 이념은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인도의 민족주의 운동은 전쟁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다. 1914년까지 제국의 한 축이었던 인도 국민회의는 전쟁이 끝나자 적으로 돌아섰다. 간디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힘도 결국은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민족주의 조직이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하자 전 세계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이야기이며 그 역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시작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인도는 제1차 세계대전과 평화회의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한 독립을 향한 길을 걷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1차 세계대전을 기대했지만, 결국 모두 실망과 환멸을 경험했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베트남도 식민주의를 떨쳐내고 민족자결권을 주장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중국, 베트남,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유학자들이 레닌주의혁명의 조직적 무기를 채택한 무자비한 지도자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인도인은 마침내 독

7 Sophie Quinn-Judge, 2003, *Ho Chi Minh: The Missing Years 1919-194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11-18.

“

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1차 세계대전을 기대했지만,
결국 모두 실망과 환멸을 경험했다.

”

립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럽 전쟁 이후 1919년의 아시아는 1914년의 아시아와는 사회적, 경제적, 사상적, 문화적, 이념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랐다. 넓게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변화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특히 아시아에서 오래된 유교 문명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중국이 국가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서구와 대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다. 1차 세계대전과 함께 인도는 독립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고 중국은 국제화와 국가 쇄신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사실 1차 세계대전은 아시아 전역의 세계관과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전쟁 후 중국과 베트남은 결국 공산주의를 따르게 되었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변화된 일본이 등장했고 결국 서구에 도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 인도의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중국의 량치차오(梁啟超)와 같은 아시아 사상가는 물론 일본의 많은 사람이 아시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은 한국의 이승만(李承晩),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 베트남의 호찌민, 인도의 간디, 일본의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등 5개국의 미래 지도자의 사고와 정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이 지도자들은 모두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거나 전쟁과 전후 세계 질서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 마오쩌둥은 전쟁과 파리강화회의에 대해 글을 썼고,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에 파견된 중국 노동자의 발자취를

따라 프랑스에 갈 생각까지 했다. 호찌민은 이미 파리에서 프랑스가 정복하고 분단한 조국을 위해 개인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었다. 간디가 인도 독립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은 전쟁 중에 시작되었고 파리강화회의 이후였다. 미국으로 망명한 이승만은 월슨과의 인맥과 미국 정치 수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한국 독립을 추진하려 했고, 파리로 가서 직접 한국의 대의를 위해 일하고 싶어 했다. 파리 주재 일본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된 고노에 후미마로는 연합국이 국제연맹 헌장의 인종 평등 조항을 거부하면서 세계에서 일본의 위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동시에 각국의 상황도 극적으로 변했다. 전쟁 동안 중국은 하나의 국가로 뭉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인도는 독립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결국 사회주의의 길을 걷게 되지만, 일본에서는 전쟁을 통해 새로운 국가적 자부심이 생겨나 결국 일본이 군사적 방법을 채택하고 서구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의 전쟁 참전은 연합군 측에 도덕적 명성과 전략적, 인적 자원의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 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비극과 역설,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제국의 야망이 충돌한 전쟁이었지만, 중국은 공화국과 민족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제국을 파괴했다. 일본은 전쟁을 제국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고, 한국, 인도, 인도차이나는 이 경험을 통해 제국주의적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향해 나아갔다.

5. 나가며

아시아의 다양한 참여는 제1차 세계대전을 진정한 ‘세계’ 전쟁(World War)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전쟁(Great War)으로 만들었다. 제1차 세계대

특별기고

전에서 아시아인의 참전은 아시아와 세계사 모두에서 독특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1차 세계대전을 아시아의 역사 속에, 아시아인을 전쟁의 국제사에 보다 온전히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아시아인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특별한 여정과 경험을 공유한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이 짧은 글이 아시아인들이 공유한 역사를 더 잘 이해하여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건강하고 평화로운 여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쉬궈치(徐國琦, Xu, Guoqi)

홍콩대학(香港大學) 역사학과 교수

하버드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 트랜스내셔널 역사연구소(Institute of Transnational History of China)의 설립 책임자다. 주요 저서로 *China and the Great War*(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Strangers on the Western Front*(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Chinese and Americans: A Shared History*(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Asia and the Great War: A Shared History*(Oxford University Press, 2016) 등이 있다.

포커스 I

제1차 세계대전: 파괴적 전쟁의 유산

**제1차 세계대전과 총력전:
전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신호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베르사유조약과 모지 위의 실험실

신종훈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

**단견과 오관, 예상 못 한 결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제1차 세계대전
도발과 제국의 해체**

김지영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교수

제1차 세계대전과 총력전 전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신호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총력전’ 형태의 전쟁이었다. 총력전이란 단순히 전쟁터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모든 국민과 자원을 전쟁에 활용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으로 이전 국가 간의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후방에 있는 국민까지 동원하였다. 이 때문에 사회 전반을 전쟁의 일부로 만들었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으로 일컬어졌지만, 결국 주요 전장이 되었던 유럽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까지 영향을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투원 7명당 1명꼴인 약 1,000만 명이 전투 중 사망하였다. 여기에 민간인 역시 800만~1,000만 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2,200만 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중 700만 명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독일은 활동 가능한 남

포커스 I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

출처: 위키미디어

성 인구의 15.1%, 오스트리아-헝가리는 17.1%, 프랑스는 10.5%를 전쟁으로 잃었다.¹ 이러한 사상자는 인류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전쟁의 결과였고,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전쟁’에 직간접적인 참전을 강요당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는 이후의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¹ Philip J. Haythornthwaite, 1996, *The World War One Source Book*, London: Arms and Armour, pp.382-383.

1. 국가 전체가 전쟁에 동원되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각국은 전쟁을 위해 국민과 자원을 총동원하였다. 전쟁 초반에는 전쟁이 비교적 짧게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전쟁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의 전쟁에서는 주로 오랜 기간 훈련받은 상비군이 싸웠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 전쟁에 징집되었다.

영국은 1916년에 ‘군사 서비스법(The Military Service Act)’을 제정하여 의무징병제를 도입하였다. 법률에 따라 영국에서는 18~41세 사이의 모든 독신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하였다. 이는 영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법을 통해 수백만 명의 젊은 남성이 징집되어 전선으로 보내졌으며, 같은 시기에 다른 참전국들도 대규모 징집으로 병력을 확보하였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전쟁이 길어지면서 대규모 징집으로 전쟁 인력을 확보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국군의 징병 연령은 전쟁의 양상에 따라 변화했다. 전쟁 초기에 독일 제국은 19~45세 사이의 남성을 징병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병력을 유지하였다. 여기에 군사적 훈련을 이미 받은 예비군을 전쟁 초기 단계부터 동원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손실이 커지자 독일은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고, 징집 연령을 점차 확대하였다. 전쟁 후반부에는 징집 연령이 낮아져 17세 젊은이까지 징집되었으며, 반대로 상한 연령도 높아져 50세 이상의 남성도 군 복무에 소환되었다.

이와 함께 독일에서는 1916년 ‘히텐부르크 계획’이란 경제 동원 전략



영국 징병 관련 의결 소식(1916)

출처: "For, 383; Against, 36: The Military Service (No. 2) Bill Passes Its Third Reading In The House of Commons," *Illustrated London News*, Jan. 29, 1916

이 채택되었다. 이 계획은 민간경제를 군수경제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기와 탄약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힌덴부르크 계획은 전쟁의 지속을 위해 농업, 공업, 교통망 등 모든 국가 자원을 전쟁에 맞춰 재정비하는 강력한 통제체제였다. 이 계획 덕분에 독일은 전쟁 후반까지 대규모 전투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민간경제는 극도로 피해를 겪었다.

전쟁의 영향은 단지 전장에서 끝나지 않았다. 남성이 징집되면서 그들이 맡았던 일들을 대신할 인력이 필요해졌다. 여성과 노인까지 전쟁 물자

“

총력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점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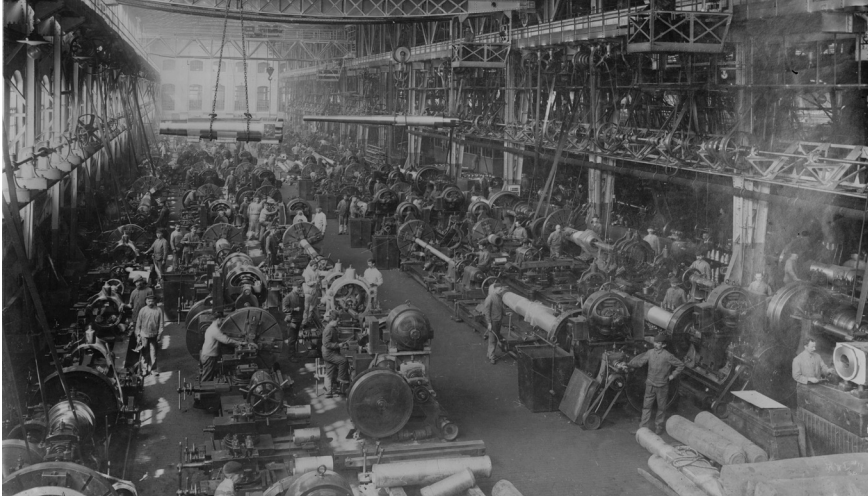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은 군수품 공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농업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여성 농업군(Women’s Land Army)’ 등이 조직되어 여성이 농장을 운영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 생산을 유지하였다. 이는 남성이 주로 맡던 역할을 여성이 대신하게 된 사회적 변화였으며, 전쟁 후에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 민간인도 전쟁의 목표가 되다

총력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점이었다. 이전의 전쟁은 주로 군대 간의 전투로 국한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민간인도 전쟁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민간인은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적국의 민간인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는 전쟁이 군사적 목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기반까지 파괴하려는 총력전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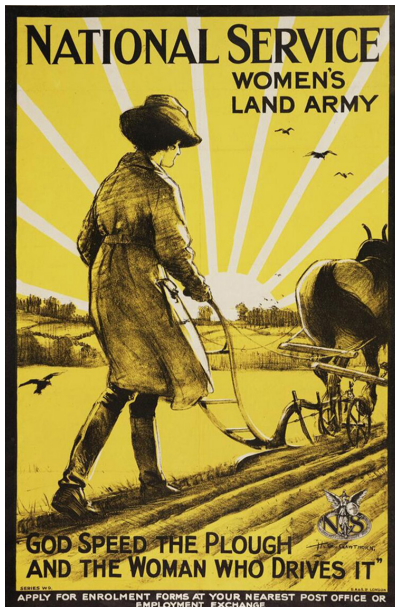
독일은 1915년과 1917년 사이에 체펠린비행선(Zeppelinluftschiff) 등을 이용해 영국 런던과 기타 도시를 공습하였다. 이는 전투만으로는 전쟁의 승패를 가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전술로, 민간인을 직접 공격하여 적국의 사기와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

포커스 I



1916년 독일 힌덴부르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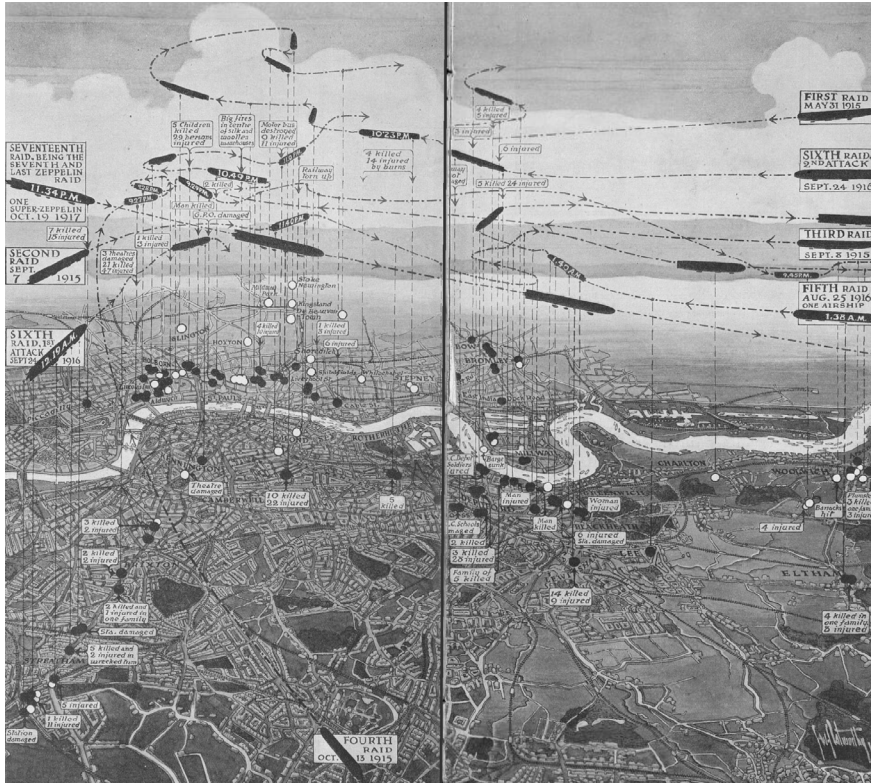
출처: Bain News Service, Gun Shops, Krupps [i.e., Krupp], Essen(Library of Congress 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 Washington, D. C. 20540)



여성 농업군, 쟁기와 그 쟁기를 모는 여인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출처: Imperial War Museums

포커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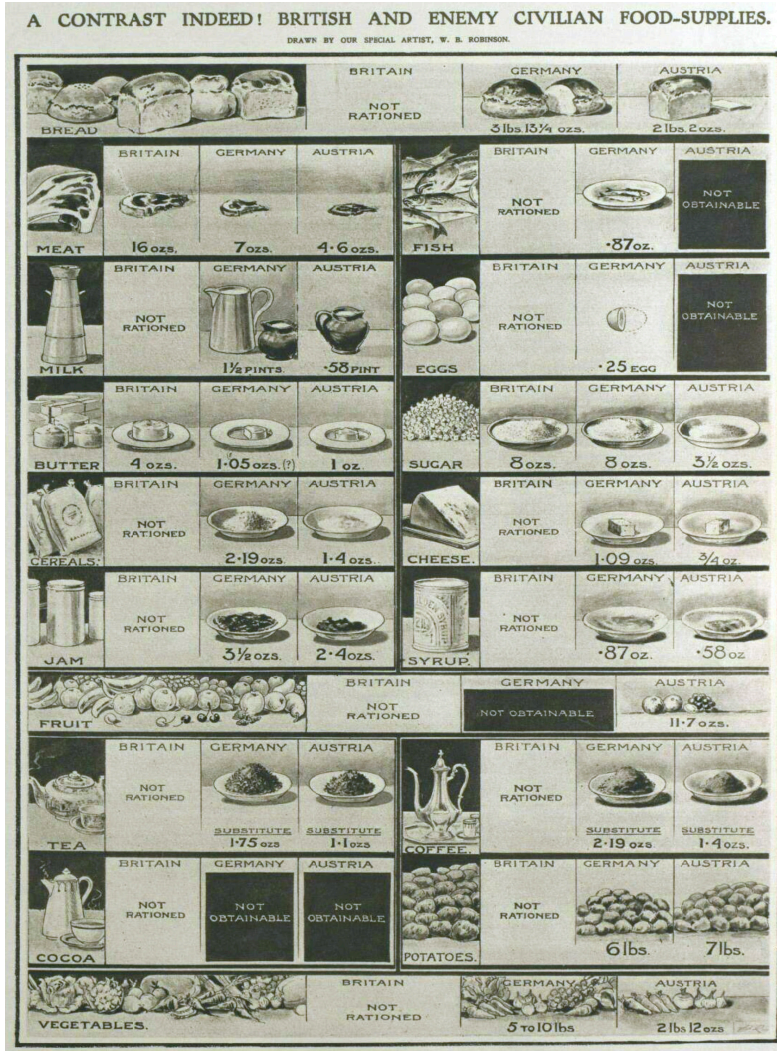
체펠린비행선의 런던 폭격

출처: "THE SEVEN ZEPPELIN RAIDS OVER LONDON," *The Sphere*, Feb. 8, 1919

의 공습은 단순한 군사 공격을 넘어선 것이었으며, 민간인이 전쟁의 주요 목표가 되는 새로운 전쟁 양상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한, 영국과 독일은 상대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해상 봉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영국은 독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특히 식량과 원자재를 차단하는 봉쇄를 시행하여 독일 내에서 심각한 식량 부족을 초래하

포커스 I



식량 상황 비교(1918.3)

출처: "A Contrast Indeed! British and Enemy Civilian Food-Supplies: The Food Situation in this Country Compared with that in Germany and Austria: Relative Rations and Supplies (or Absence Thereof) Shown in Diagram," *Illustrated London News*, Mar. 9, 1918



독일 잠수함의 무차별 공격

출처: "Germany Lies Again! The "Arabia" Not "A Transport", " *Illustrated London News*, Nov. 25, 1916

“

병사들은 비참한 환경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계속해야 했으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

”

였다. 이는 독일 민간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기근으로 고통받았다. 반대로, 독일 역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쳐 상선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이는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민간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처럼 전쟁의 피해는 전투에만 한정되지 않았고, 민간인까지 전쟁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3. 끝나지 않는 소모전

제1차 세계대전은 서로가 상대를 소모시키는 소모전으로 변하였다. 특히 서부 전선에서는 군대가 참호에 고립되어 몇 년 동안이나 큰 진전 없이 싸우는 상황이 이어졌다. 병사들은 비참한 환경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계속해야 했으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베르됭전투(Battle of Verdun, 1916)와 솜전투(Battle of the Somme, 1916)를 들 수 있다. 베르됭전투는 약 10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이는 연합국과 동맹국이 서로의 병력을 소모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전투였다. 솜전투에서도 14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양측 모두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실패하였다. 이 전투는 소모전의 전형적인 예로, 상대방의 자원과 병력을 소진시키는 데 중점을 둔 전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베르딩 구역의 참호전 광경(1918. 11)

출처: National WWI Museum and Memorial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의 요건은 흔히 이야기하듯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였다. 이 때문에 본국에서의 자원 공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선에서는 병력과 물자가 끊임없이 필요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본국의 경제적 지원이 전쟁의 지속성을 보장하였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군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본국에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경제를 유지하는 민간인이었다. 이 때문에 국가 생산력을 담당하는 민간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4. 기술 혁신과 전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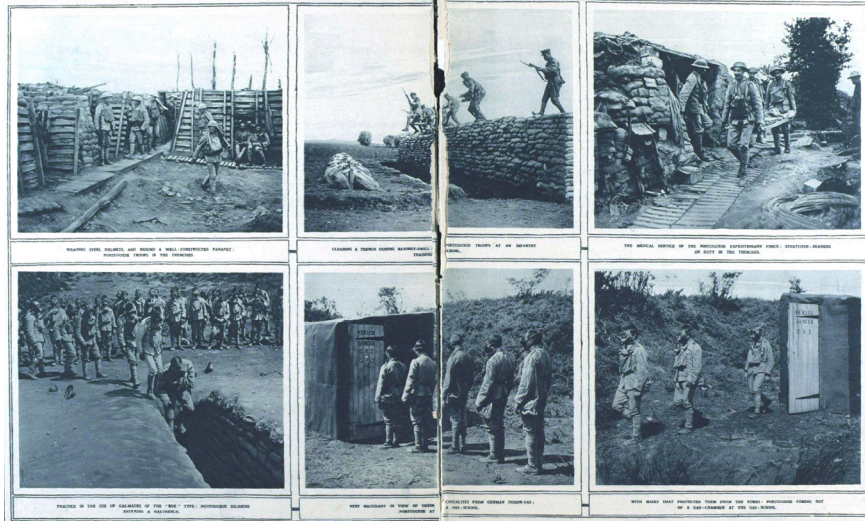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 기술의 발전이 전투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전쟁이었다. 전쟁 중 탱크, 비행기, 화학 무기 등 새로운 무기가 대규모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전쟁을 훨씬 더 치열하고 비인간적인 양상으로 변모시켰다. 탱크는 참호전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솜 전투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투입되었다. 비행기와 비행선은 초기에는 주로 정찰에 사용되었으나, 점차 적국의 도시와 산업 시설을 폭격하는 데 활용되었다. 독가스와 같은 치명적인 무기가 전장에 등장하면서, 병사에게는 새로운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신기술은 전쟁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군사적 충돌이 단순히 전장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를 위협에 노출시킨 총력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전쟁이 남긴 상처와 변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국가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전쟁 중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로 인해 각국의 경제와 사회는 큰 타격을 입었다. 유럽 주요 국가는 전후에도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렸다.

또한, 전쟁 중 여성이 대거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은 전쟁 후에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전쟁 직후 여성이 참정권을 얻는 등 여성의 권리 신장과 사회적 변화로 이어졌다.

포커스 I



참호와 화학전 대비 훈련

출처: "Britain's old Ally in the Field with the British: Portuguese at the Front and at Gas-Drill," *Illustrated London News*, July. 21, 1917

제1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국가 전체가 전쟁에 동원되는 총력전의 시작을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전쟁은 군대와 민간인의 경계를 허물었고, 전쟁이 국가의 모든 자원과 인구를 동원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총력전의 개념은 더욱 극단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민간인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었으며, 총력전의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현대 전쟁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다. 이 전쟁의 파괴력과 살상력은 기존의 상상을 초월하였으며, 전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

제1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국가 전체가 전쟁에 동원되는 총력전의 시작을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

”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총력전의 무서움을 가르쳐 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그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신효승(辛曉承, Shin, Hyo-seung)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연세대학교에서 「20세기 초 국제 정세 변동과 한인 무장독립운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폭넓게 한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전쟁사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조선, 세계의 화약고, 전쟁으로 보는 한국 근대사』(2022), 『신미양요』(2021)가 있으며, 그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베르사유조약과 모지 위의 실험실

신종훈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

1. 프롤로그: 대전쟁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대전쟁(The Great War)으로 알려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라는 두 개의 적대적인 동맹체제의 대립으로 인해 유럽의 모든 강대국이 이 전쟁 속으로 들어왔다. 그 결과 나폴레옹시대 이후 최초의 대규모 국제전이 유럽인들을 화마 속으로 몰아갔다. 유럽을 무대로 시작된 대전쟁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독일 식민지 지역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고, 1917년에는 미국까지 참전함으로써 명실공히 제1차 세계대전이란 이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유럽 국가들 여론의 분위기에서 이상할 정도로 두려움과 암울함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20세기 초 대부분의 유럽 정



‘파리로 가는 소풍’ 문구가 적힌 수송 열차

치가와 군의 지도자들은 두 동맹체제의 대립으로 인해 그들 생애 내에 큰 전쟁을 경험할 것을 예상했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전쟁의 결과를 걱정하기보다는 기다렸던 전쟁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1914년 여름날의 열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했다. 전선으로 향하는 군인들마저 저마다 승리의 기대감과 흥분을 감추지 않았고, 환송하는 열광에 찬 군중들도 출정하는 군인들을 축하하면서 전쟁의 열기에 함께 도취했다.

전쟁을 환호하는 격앙된 분위기는 동상이몽이 빚어낸 착각의 산물이었다. 유럽 열강들은 저마다 자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넘쳤고, 19세기 대부분의 전쟁이 그랬듯이 전쟁은 그리 오래가지 않으

리라 생각했다. 전선으로 향했던 성급한 군인들은 ‘낙엽이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을 기대했고, 좀 더 신중했던 자들은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군인들을 전선으로 보내는 독일의 수송 열차에는 ‘파리로 가는 소풍(Ausflug nach Paris)’이라는 웃지 못할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이렇듯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대다수 유럽인은 독일 황제 빌헬름 2세(Wilhelm II)의 언급처럼 이 전쟁이 ‘즐거운 작은 전쟁’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소수의 비관적인 사람들만이 끔찍한 전쟁의 결과를 어렴풋이 내다볼 수 있었다. 그 비관적인 한 사람에 속했던 영국의 외무장관 그레이(Edward Grey)는 1914년 8월 초 ‘유럽 모든 곳에서 램프가 꺼져갈 것이고, 그 램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켜지지 않을 것’이라며 암울한 미래를 경고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적중했다. 전쟁은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4년 이상 지속되었고, 예상할 수 없었던 천문학적 피해를 낳고야 말았다. 전쟁으로 유럽은 황폐해졌고, 쉽게 치유되기 힘든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 전쟁으로 3천 8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1천만 명에 육박함으로써 유럽 전체가 묘지로 둔갑했다. 전쟁 때문에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 등 4개의 유럽 제국이 해체됨으로써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의 국가체제는 이제 불안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분수령을 맞이해야만 했다.

이 전쟁이 이전의 시대를 좋았던 옛 시절로 보이게 할 만큼 유럽에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내상을 입힐 것이라고는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유럽이 내상을 입는 동안 서양 자본주의의 중심은 대서양 저편의 미국으로 이동했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했다. 1918년은 바

“

“제1차 세계대전은 옛 유럽을 파괴했고,
제2차 세계대전은 새 유럽의 필요조건들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역사가 주트의 진술처럼 파괴된 옛 유럽을 대신하는 새 유럽은
또 다른 전쟁을 겪은 후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

야흐로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해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바로 오지 않았고 그 등장을 위해서는 또 다른 진통이 필요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옛 유럽을 파괴했고, 제2차 세계대전은 새 유럽의 필요조건들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역사가 주트(Tony Judt)의 진술처럼 파괴된 옛 유럽을 대신하는 새 유럽은 또 다른 전쟁을 겪은 후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2. 베르사유조약

1919년 1월 18일 베르사유궁전 거울의 방에서 32개 승전국의 대표들만 참여한 파리강화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사실상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4대 강국(Big Four)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회의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과 패전국들 사이에서 5개의 평화조약(강화조약)이 각각 체결되었다.¹ 그중 승전국들의 주적이었던 독일이 1919년 6월 28일 서명

1 5개의 평화조약은 1919년 6월 28일 독일과 체결한 베르사유조약, 1919년 9월 10일 오스트리아와 체결한 생제르맹조약, 1919년 11월 27일 불가리아와 체결한 뇌이조약, 1920년 6월 4일 헝가리와 체결한 트리아농조약, 1920년 8월 10일 오스만 제국과 체결한 세브르조약이다.

“

평화체제 구축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베르사유조약이 패자의 처지를 배려하여 승자와 패자가
공동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타협적인 조약이 아닌,
패자에 대한 가혹한 징벌적 규정들을 강요하는
강제 조약이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

해야만 했던 조약이 베르사유조약이다. 학계는 베르사유조약과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으로 상징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평화 질서에 ‘베르사유체제’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국제법의 지위를 가지는 평화조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쟁의 피해 보상, 법률적 평화의 회복 및 지속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에 있다. 그러나 베르사유조약은 피해 보상 방식을 정하고 평화의 법적인 회복은 이를 수 있었지만, 전후 지속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에는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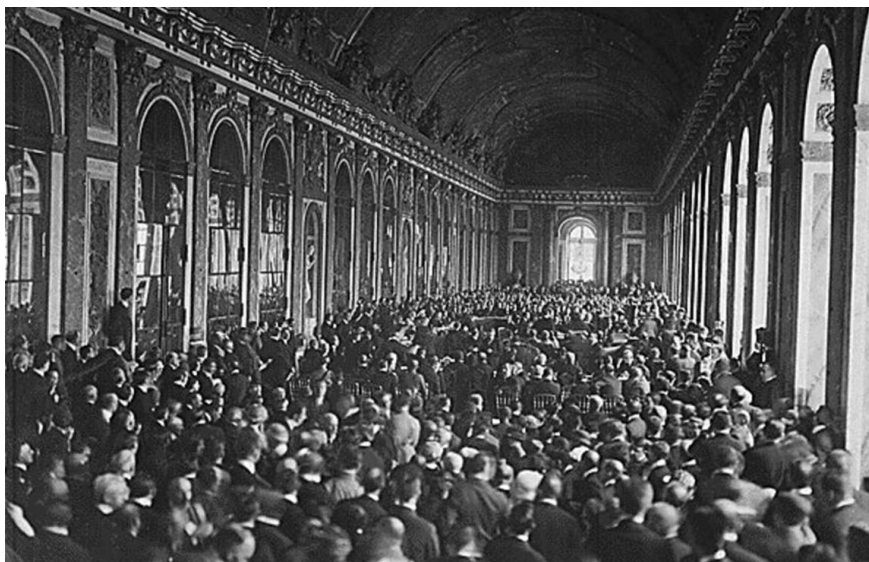
평화체제 구축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베르사유조약이 패자의 처지를 배려하여 승자와 패자가 공동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타협적인 조약이 아닌, 패자에 대한 가혹한 징벌적 규정들을 강요하는 강제 조약이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조약의 규정들은 패전국 독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승전국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의 산물로서 탄생했다. 이 점에서 파리강화회의는 나폴레옹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구질서를 회복한 1815년의 빈체제가, 패자였던 프랑스를 협상테이블로 초대함으로써 유럽의 협조체제(Concert of Europe)를 구축할 수 있었던 역사적 교훈을 무시해 버렸다.

베르사유조약은 독일에 대한 안보 우려와 함께 복수를 원했던 프랑스

측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었고, 그 결과 가혹한 징벌적 조약이 되었다. 영토 및 식민지 상실, 군사력 제한 등의 일반적인 평화조약 규정도 독일인에게는 굴욕적이었다. 하물며 전쟁의 모든 책임을 독일과 그 동맹국에 전가함으로써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든 제231조 전쟁책임 조항은 독일인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억지에 가까웠다. 그러한 이유로 독일인들은 이 조약을 승자와 패자 사이 협상과 타협의 결과물이 아니라 승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명령(Diktat)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가혹한 조약에 서명하는 정부는 치명적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명의 거부는 연합국에 의한 독일의 군사적 점령이라는 더 큰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도 명약관화했다. 덜 나쁜 것을 선택해야 했고, 전쟁이 끝날 무렵 정권을 이양받았던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 바이마르 정부는 결국 사라진 독일 제국의 정부가 책임져야 했던 평화조약 서명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의 실험은 정부의 조약 서명이라는 일종의 원죄로 인해 시작부터 반체제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 결과 바이마르 민주정은 결국 나치의 제3제국으로 퇴행하는 위태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다.

영국 협상대표단의 일원으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했던 경제학자 케인스(John M. Keynes)는 1919년 6월 초 베르사유조약의 징벌적 성격에 반발하면서 베르사유를 떠났다. 케인스는 치유도 포함하는 평화조약의 원래 목적을 배반했던 가혹한 베르사유조약이 분열된 유럽에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올 ‘카르타고 평화’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1920년 출판된 『평화의 경제적 대가(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라는 저서에서 케인스는 파리강화회의가 ‘악몽’이었고, 협상의 중요한 결정자들이 ‘병자들’



베르사유궁전 거울의 방에서 거행된 베르사유조약의 서명

이었다는 독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만약 우리가 고의로 유럽 심장부의 빈곤을 목표로 삼는다면, 감히 예언하건대 복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케인스는 경고했고, 그 경고는 20년 후 현실이 되고 말았다.

미국 대통령 윌슨(Thomas W. Wilson)의 주도로 베르사유조약 제1조에 따라 1920년 1월 평화 유지의 중책을 맡은 국제연맹이 출범했다. 집단안보체제로서 탄생한 국제연맹 역시 평화기구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도 국제연맹 규약이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지 못함으로써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할 수 없었다. 강대국 러시아의 참여도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다. 그 결과 연맹은 분쟁의 실질적 중재 기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한 채 출범했다. 그 외에도 국

제연맹은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회원국에 강제할 수단을 사실상 갖지 못했다. 중요한 안건들은 만장일치의 합의가 필요했고, 결의안들은 ‘권고(recommendation)’의 형태로 회원국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대전쟁의 파국으로 인해 기존 규범과 가치들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수립된 베르사유체제의 시작도 순탄치 않았다. 오스만 제국의 몰락 이후 1923년 튀르키예 공화국이 선포되기 전까지 세브르조약의 비준을 거부했던 튀르키예는 조약에 불만을 표하면서 아르메니아, 그리스 등과 전쟁을 벌였다. 전후 1795년 분할 이후 처음으로 유럽 지도에 이름을 새길 수 있었던 폴란드도 1920~1921년까지 러시아와 영토 전쟁을 벌이는 등 베르사유 평화체제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또한 전쟁의 피해복구와 과도한 전쟁배상 문제로 인해 전후 유럽의 경제는 출발선에서부터 1929년 대공황의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처럼 베르사유체제는 결함을 지닌 채 탄생했다. 역사가 뒤로젤(Jean-Baptiste Duroselle)은 베르사유체제가 ‘유럽의 협조’도 ‘유럽의 공법’도 ‘유럽의 균형’도 사라진 ‘무정형의 유럽’을 탄생시키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그가 보기에 베르사유체제의 유럽은 ‘아주 처량한 유럽, 자체 안에 소멸의 씨앗을 품고 있는 유럽’의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² 심지어 베르사유체제는 승전국의 일부도 불만을 가졌던 위태로운 평화였다. 베르사유 조약의 독일에 대한 징벌적 규정이 오히려 관대했다는 불만을 가졌던 프랑스 원수 포슈(Ferdinand Foch)는 “그것은 평화조약이 아니며, 단지 20년

2 장-바티스트 뒤로젤 지음, 이규현·이용재 옮김, 2004, 『유럽의 탄생』, 지식의 풍경, 299-300쪽.

“

역사가 뒤로젤은 베르사유체제가 ‘유럽의 협조’도 ‘유럽의 공법’도 ‘유럽의 균형’도 사라진 ‘무정형의 유럽’을 탄생시키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그가 보기에 베르사유체제의 유럽은 ‘아주 처량한 유럽, 자체 안에 소멸의 씨앗을 품고 있는 유럽’의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

간의 휴전협정일 뿐이다”라는 불평까지 토로했다.³ 이 같은 억지는 가증스러운 불의에 희생되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독일인의 증오와 복수심을 배가시켰다. 공교롭게도 20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가혹한 역사는 포슈가 예측한 대로 흘러갔다.

3. 묘지 위의 실험실

대전쟁의 결과 묘지로 둔갑한 유럽에 등장한 베르사유체제는 깨지기 쉬운 평화였고, 이 불안정한 평화 위에서 유럽은 위험한 이데올로기의 실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다수의 동시대인조차 또 다른 전쟁이라는 임박한 파국의 위협을 이미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의 일부 지식인들은 1945년의 평화를 1939년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아닌 1914년 발발한 대전쟁을 마침내 마감하는 평화로 생각했다. 영국의 외무장관 이든(Robert A. Eden)과 프랑스 철학자 카

3 John Merriman, 2010, *A History of Modern Europe: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W. W. Norton & Company, p.967.

뫼(Albert Camus)는 1914~1945년 사이 양차 세계대전을 17세기의 ‘30년 전쟁’에 빗대어 20세기의 ‘30년 전쟁’이라고 일컬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 개의 세계대전이 연속된 하나의 전쟁과 다름없었다. 이러한 관점의 요지는 1914년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갈등들이 1919년이 아닌 1945년 이후에야 비로소 해소될 수 있었다는 견해다. 베르사유조약 체결 이듬해 출판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이란 저서에서 레핑턴(Charles Repington)도 베르사유조약이 대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조만간 두 번째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까지 예상했다.

대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렸던 1919~1939년까지 전간기(interwar period) 유럽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베르사유체제의 등장을 바라보면서 케인스는 “우리는 민족들 사이의 증오와 내부적 혼란으로 분열된 채 다툼과 굶주림, 약탈과 현기증으로 가득 찬 유럽, 비효율적이고, 일자리도 없으며, 무질서한 유럽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독일의 작가 레마르크(Erich M. Remarque)는 1929년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 전쟁을 치른 한 세대의 상처와 환멸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여러 해 내내 우리의 임무는 살인이었다. 그것은 인생에서 우리의 첫 번째 천직이었다. 인생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죽음에 관한 것에 국한되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 세대의 거의 모든 청년을 뚜렷한 목적도 없이 희생시킨 기존의 권위와 가치에 대한 환멸은 대전쟁이 남긴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 되었다.

독일 작가 만(Thomas Mann)은 1924년 『마의 산』에서 대전쟁이 계몽사상과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합리성과 우파 독재의 공격적 민족주의로 대변되는 비합리성의 대결에서 폭발했다고 은유했다. 이 책에서 그는 1920년대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 만연했던 절망적 분위기를 비판적으로

“

독일의 작가 레마르크는 1929년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 전쟁을 치른 한 세대의 상처와 환멸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여러 해 내내 우리의 임무는 살인이었다.

그것은 인생에서 우리의 첫 번째 천직이었다.

인생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죽음에 관한 것에 국한되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

묘사하고 있다. “옛 유럽을 살았던 우리에게 좋고 독특한 모든 것이 사멸했다. 경탄할 우리의 합리성은 광기가 되었고, 우리의 황금은 종이 쪼가리가 되었으며, 우리의 기계는 총을 쏘거나 폭발하는 것만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예술은 자살이 되었다. 친구여 우리는 몰락하는 중이라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정치는 환멸로 가득 차서 살아남은 한 세대의 절망과 상처를 위로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무력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화해와 협조의 정신보다는 ‘신성한 이기주의’ 원칙이 우위를 점하면서 베르사유조약 이후의 20년 동안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격동, 국제적 긴장의 먹구름이 유럽의 하늘을 뒤덮고 말았다. 만이 언급했던 민주주의와 그것을 부정하는 합리성과 불합리성 대립의 골은 전쟁을 치른 이후 오히려 더 깊어져 갔다. 이 분열의 20년 동안 기존 권위에 대한 불신을 자양분으로 삼아 공산주의 혁명의 유령과 파시즘과 나치즘의 옷을 입은 전체주의 이념이 절망에 빠진 유럽의 국민들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포커스 I

1919년 이후의 새로운 시대는 유럽의 미래를 위해 다투게 될 민주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 등과 같은 경쟁적인 이데올로기의 붓을 통해 그려졌던 암울하고 절망적인 풍경을 화폭에 남기고 말았다. 전후 신생 국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초대 대통령 마사리크(Tomáš G. Masaryk)는 이처럼 처절한 유럽의 풍경에 ‘묘지 꼭대기에 세워진 실험실’이라는 오싹한 제목을 달아주었다. 천만 전몰자들의 묘지 위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던 실험들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한 이후에야 비로소 유럽은 평화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늦었지만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신종훈(申鍾埴, Shin, Jong-hoon)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서 학부를 마친 후 독일의 마르부르크 대학(Philipps-Universität Marburg) 역사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양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다. 전문 연구 분야는 유럽통합사이며 통합유럽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 학술연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단견과 오판, 예상 못 한 결말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의 제1차 세계대전 도발과 제국의 해체

김지영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교수

1. 세계대전의 전조

제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 (이하 오-헝 제국)이 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으킨 국지적 전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참전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된 전쟁이다. 오-헝 제국에서는 6개월이면 세르비아의 패배와 항복으로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했었고, 이를 통해 오-헝 제국은 세르비아마저 점령하여 확실한 이 지역의 맹주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오-헝 제국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그 어떤 나라도 이 전쟁이 4년의 기간 동안에 걸쳐 수 천만 명의 인명 피해를 내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시기의 역사가들이 이전의

“
전쟁을 일으킨 오-형 제국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그 어떤 나라도 이 전쟁이
4년의 기간 동안에 걸쳐 수천만 명의 인명 피해를 내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었다.
”

전쟁들과 비교하여 이 전쟁을 대전(大戰, Great War)이라고 칭한 데에는 자못 타당한 이유가 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와 전쟁을 벌인 데에는 페르디난트(Franz Ferdinand) 황태자의 암살이라는 구체적 사건이 단초가 되었지만, 이 사건만으로 전쟁의 원인을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사실 1차 세계대전은 이미 예견된 전쟁이었고,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황태자의 암살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1차 세계대전의 근본 원인은 1908년 오-형 제국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공식적으로 병합한 데서 시작한다. 이 지역은 원래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으나, 오-형 제국은 1878년 베를린회의에서 이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1908년 이 지역을 병합해 버렸다. 전통적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민족적 연대감을 가지고 있던 세르비아가 이 병합을 강력히 반대했고, 러시아는 세르비아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르비아는 오-형 제국에 대해 더욱 적대적이 되었다. 독일은 오-형 제국을 지지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경계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은 회피하였다. 이러한 긴장이 발칸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국제적 정세에 대한 오-형 제국 정치가와 지도자, 이 중에서도 특히 귀족을 중심으

포커스 I

로 하는 보수세력의 국제 정세에 대한 단견(短見), 오-형 제국의 군사력과 전쟁 수행 능력, 오스트리아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독일의 전쟁 수행 역량, 특히 술리펜 계획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한 오-형 제국 군 지휘부의 오판(誤判)을 거론하는 것은 타당한 견해이다.

오-형 제국의 지휘부는 오-형 제국이 세르비아와의 전쟁을 시작할 경우 러시아가 세르비아의 편에 설 것이라는 점은 예상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국가들의 전쟁 참가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였다. 그러나 오-형 제국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오-형 제국과 동맹을 맺은 독일(또는 이탈리아)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미 오-형 제국의 전쟁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전쟁은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 제국은 19세기 후반 급속한 산업 발전을 통해 유럽에서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식민지 경쟁에서도 다른 강대국들과 맞서 제국주의적 확장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오-형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독일이 자연스럽게 전쟁에 참여하게 될 명분을 얻은 것이었다.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는 곧 전 유럽으로 퍼졌으며, 이 소식을 들은 독일은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전쟁 시기 독일의 국민적 여론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전쟁 참여를 통한 독일의 이익 창출이었다. 역사학자 엑스타인스(Modris Eksteins)는 그의 저서 『봄의 제전: 1차 세계대전과 현대의 탄생』에서 “모든 전쟁처럼 1914년의 전쟁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 변화와 (개선의) 확인을 위한 기회로 보였다. 1871년 통일된 독일은 한 세대 만에 막강한 산업과 군사력을 보유한 강국이 됐고, 전쟁 직전에는 혁신과 개선의 선두적인 대변자였다”라고 서

“

독일의 참전은 영국, 프랑스, 미국의 참전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고, 발칸에서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

술하며, 독일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했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결국 독일의 참전은 영국, 프랑스, 미국의 참전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고, 발칸에서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2. 잘못된 정보, 미숙한 판단

오-형 제국이 영국, 프랑스, 미국의 참전을 예상하지 못한 이유는 외교적 오관, 국제 정세에 대한 단견, 유럽 내 전쟁 규모에 대한 과소평가와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오-형 제국의 가장 큰 첫 번째 오관은 자신과 세르비아의 전쟁이 발칸반도에서 국지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었다. 오-형 제국은 세르비아를 신속하게 제압함으로써 1908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 이후 고조된 이 지역의 반(反) 오-형 제국 정서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반 오-형 제국 정서를 제압하면 이 지역의 민족운동도 줄어들 것이라는 정세 인식이 현실을 벗어난 판단이었다는 점이다. 오-형 제국은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돕기 위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심지어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이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오-형 제국의 군사 지도부는 이 전쟁이 발칸반도 내의 한정된 지역적 갈등으로 끝난다고 예상했다. 두

“
모든 상황은 오-형 제국이 판단했던 가정과 방향의
정반대로 흘러가고 말았던 것이다.
”

번째 오판은 오-형 제국이 러시아와 세르비아의 관계는 의식했지만, 삼국 협상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모두 참전하게 되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유럽 강대국들은 복잡한 동맹체제로 얽혀 있었고, 이는 작은 충돌이 거대한 국제전으로 변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오-형 제국은 이 동맹체계의 실제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전쟁이 확산되더라도 러시아와의 국지전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 오판은 독일에 대한 과신이었다. 오-형 제국은 독일의 전쟁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할 경우에도 독일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오-형 제국은 독일이 슐리펜 계획에 따라 서부전선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이에 따라 서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깊이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쟁은 오-형 제국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특히 오-형 제국의 지휘부는 영국의 고립주의에 대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었다. 영국이 삼국 협상국 중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간 영국의 외교정책이 고립주의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과하게 인식하여 영국이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이 전쟁에서 영국이 얻을 이익이 많지 않아 대륙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유럽의 전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 오던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형 제국이 세르비아와 전쟁을 벌이더라도, 이 전쟁이

유럽 전체, 나아가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우를 범하였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오-형 제국이 판단했던 가정과 방향의 정반대로 흘러가고 말았던 것이다.

3. 예상치 못한 세계대전의 결과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유럽의 주요 제국은 붕괴되었다. 독일 제국, 오-형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이 모두 해체되었으며, 이들 왕조는 전쟁의 패배와 함께 몰락했다.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오-형 제국은 여러 개의 독립 국가로 분열되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1917)이 일어나 소련이 성립되었다.

특히 오-형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붕괴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의 신생 독립국이 동유럽 지역에 탄생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분할해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등을 식민지화하거나 위임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은 이후 중동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하여 오-형 제국이 해체되는 결과를 맞이했지만, 이러한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었다.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오-형 제국의 해체를 바라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1867년 오-형 제국이 성립될 당시부터 제국은 복잡한 민족 구성으로 인한 통합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다민족 국가의 불안한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 강압적인 민족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책은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민족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오-형 제국을 해체하여 각 민족 국가를 성립한다는 사상은 전쟁이 시작되고 오-형 제국의 전세가 불리해지는 시점부터 전면적으

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오-형 제국의 지도부는 전쟁 이전에는 민족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민족 정책으로 오스트리아인(독일인)과 헝가리인을 제외한 여타 제국의 구성민족을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오-형 제국은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패한 이후, 1867년 오스트리아 제국과 헝가리 왕국 간의 타협에 의하여 탄생한 제국으로서 제국의 토대가 매우 취약하였다. 특히 이 제국은 두 개의 독립된 국가인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한 사람의 군주에 의해 통치되는 형태였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황제인 요제프 1세(Franz Joseph I)가 헝가리 국왕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각각 독자적인 정부를 유지하는 독립적 정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제국의 통일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특히 오-형 제국의 구성이 독일인, 헝가리인,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폴란드인, 루마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우크라이나인, 이탈리아인 등으로 되어 있었고, 이들 각 민족은 각자 독자적이고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 내에서 민족 간 갈등과 긴장이 상존하고 있었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오-형 제국 내의 다양한 구성민족들도 독립을 요구하거나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제국 내에서의 민족운동은 슬라브 민족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제국의 공업지대인 보헤미아 지역은 체코 민족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제국의 남부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남슬라브 민족이 주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던 민족문제는 제국의 안위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였다. 특히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국민의 교육 수준도 높았던 서

슬라브 민족의 지역인 체코에서의 민족운동은 마사리크(Tomáš G. Masaryk)의 지도하에 체코 민족의 단결과 독립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마사리크의 목표는 제국 내에서 체코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이 목표가 수정되어 독립적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남슬라브 지역에서는 체코보다는 덜 활발하였지만 크로아티아인 민족주의자인 트룸비치(Ante Trumbic)를 중심으로 하는 런던망명정부의 지도하에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슬로베니아인들이 하나의 남슬라브 국가(유고슬라비아)를 형성하려는 운동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1914년 6월 28일, 오-형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인 19세의 프린치프(Gavrilo Princip)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4. 제국의 붕괴와 후속국가의 성립

1918년 전쟁에서의 패배와 함께 오-형 제국은 급속히 붕괴했다. 헝가리는 독립을 선언했고,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의 신생 국가들이 제국의 잔해 위에 설립되었다. 1918년 11월 11일, 요제프 1세의 후계자인 카를 1세는 퇴위하였고, 오-형 제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이후 오-형 제국을 계승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가 탄생하였다. 후일(1928) 이들 세 나라는 오-형 제국의 부흥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협약체를 구성하였다. 이 공동협약체가 소위 소협상국(Little Entent)이다. 소협상국은 체코의 마사리크의 주도하에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가 형성한 협상이다. 이 협상의 주된 목표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시도할 수도 있는 실지(失地) 회복이나 영토 수

“

1918년 전쟁에서의 패배와 함께 오-헝 제국은 급속히 붕괴했다.
헝가리는 독립을 선언했고,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의
신생 국가들이 제국의 잔해 위에 설립되었다.

”

정주의 움직임은 저지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빼앗긴 이전의 영토 수복과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협상이었다. 연합국 편에서는 프랑스 제3공화국이 세 나라와 각기 조약을 맺어 이 동맹을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소협상국은 독일의 힘이 급속히 강성해지면서 1938년 붕괴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동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원래 소협상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의 붕괴라는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제국 내 각 구성민족의 지도자들에 의해 이미 예견되고 있었던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이었다. 이러한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는 당대의 정치가들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28년 주변적 환경에 의해 소협상이 성립되고, 이 협상이 성립된 이후 헝가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 문화적인 부분에서 헝가리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위기에 대한 담론이 분출하며 정국이 혼란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전쟁의 결과가 늘 그러하듯이 전쟁은 패전국이든 승전국이든 전쟁 당사국의 각성을 촉발한다. 그 결과는 희극적이거나 비극적이다. 헝가리는 비극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은 헝가리인에게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은 헝가리 현대사의 차후 방향을 가름지었다. 특히 전간기의 극우 민족주의의 광풍은 가장 나쁜 후과에 해당한다. 헝가리의 극우 민족주의운동은 주로 트리아농조약(Treaty of

Trianon)으로 잃은 영토와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헝가리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이 조약으로 잃은 영토를 되찾고, 헝가리의 과거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들은 주로 인접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과의 영토 분쟁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경한 외교 정책을 주장했다. 사실 1920년에 체결된 트리아농조약은 헝가리에게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 조약에 의해 헝가리의 영토 중 70%가 남의 나라 땅이 되었으며, 헝가리 전체 인구의 60%가 외국인이 되는 운명을 겪었다. 헝가리가 유럽에 정착하여 최초로 국가를 건설했던 역사적 지역을 포함하여 대략 300만 명의 헝가리인이 이전 헝가리의 국경 밖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헝가리의 강한 반발과 극우 민족주의운동의 주요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발흥한 극우 민족주의는 실지 회복을 위한 전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전화(轉化)되었다.

이런 극우 민족주의운동의 대표적 양태가 ‘대헝가리주의’이다. ‘대헝가리주의’는 헝가리가 역사적으로 지배했던 영토, 특히 트란실바니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보이보디나를 되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헝가리 민족주의자들에게 강한 감정적 호소력을 가졌으며, 헝가리의 외교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헝가리는 ‘대헝가리주의’를 추진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와 연대했다. 여기서 또 한 번 헝가리 정치인의 단견과 오판의 결과를 보게 된다. 단견과 오판에 의해 독일, 이탈리아와 연대한 헝가리는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에 걸쳐 나치 독일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1938년 뮌헨협정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의 남부 슬로바키아와 루테니아를 되찾았고, 1940년 제2차 빈 중재에 따라 트란실바니아 북부를 루마니아로부터 되찾았다. 이 지역의 영토 회복은 일견

포커스 I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민족 구성(1910)

출처: 위키미디어

헝가리 외교 정책의 성공으로 보였으나, 이는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헝가리가 추축국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되는 족쇄가 되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독일과 그 연합 세력은 패전국이 되었고, 헝가리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중재를 통하여 일부 회복하였던 영토를 다시 상실하고 말았다.

단견과 오판에 의해 1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오-헝 제국은 패배와 더불어 제국이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후 헝가리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편에서 참전한 대가를 치렀다. 전승국들의 결정에 의해 헝가리를 포

포커스 I

함하여, 독일의 지배하에 있던 유럽의 동부지역은 전승국인 소련에게 처분권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헝가리는 소련군과 함께 헝가리에 진주한 헝가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장악되었다. 이후 이를 토대로 1949년 공산정부가 수립되었다. 오스트리아 또한 일정 기간 소련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공산화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김지영(金志寧, Kim, Ji-young)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교수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외트베시 로란드대학교(ELTE)에서 헝가리 현대사 분야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헝가리 현대사, 동유럽사, 동유럽의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다. 연구 논문과 학술 저서, 대중 교양서, 대중 강연을 통하여 헝가리와 동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있다. 경기도 원폭피해자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커스 II

제1차 세계대전: 동아시아의 전환점

제1차 세계대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장세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봉괴의 분수령

조건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제1차 세계대전과 중국의 서양 인식 변화

이한결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제1차 세계대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장세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1. 제1차 세계대전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관련성

2024년 11월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이 되는 달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종전,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사이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성립한 이른바 ‘베르사유체제’, 나아가 ‘워싱턴회의체제(1922~1930)’와 우리 민족의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은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하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파리강화회의, 그리고 이후 임시정부의 성립 등의 흐름을 개관하면서, 그 의미를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

아가 세르비아에 대해 선전포고하면서 시작되었는데,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끝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의 연합국(협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 제국 등의 동맹국 양 진영이 식민지 등의 이권을 둘러싸고 싸운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그 배경은 1900년 전후 시기 ‘제국주의’ 시대의 본격화와 식민지 쟁탈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1919년의 ‘베르사유체제’는 세계정치 구조를 변혁시킨 제1차 세계대전의 성격과 같은 맥락에서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부상

1914년 8월 전쟁이 발발한 뒤, 기차역에서 자식을 전선에 보내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집에서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작별 인사였다. 이른바 유럽의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명의 전투원을 서로 살육하는 ‘야만인’의 행동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15년부터 영국·프랑스 사이의 채널(Channel) 해협부터 스위스에 이르는 400마일의 전선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참호전의 양상이 펼쳐졌다. 참호를 파는 데 중국인 노동자가 10만여 명이나 동원되었다. 독가스, 탱크와 같은 군사기술이 개발되고, 1916년부터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한 인명과 자연의 파괴는 역사상 처음 있는 현상이었다.¹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의 양상과 전투 수행 방식 등에서 이전의

1 김용구, 2010, 「베르사유 체제의 역사적 의의와 한반도」, 『3·1운동과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 동북아역사재단, 219쪽.

“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베르사유체제’는
유럽 시대의 종말과 함께 미국 시대의 도래를 의미했다.

”

전쟁과는 질적으로 크게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전쟁이었다.²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연구는 2014년 발발 100주년에 즈음하여 활성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쟁의 기원, 연합군의 승리 원인과 높은 사상률에 대한 장군들의 책임성, 장병들의 사기 및 기율(紀律), 국가의 전쟁노력에 대한 민간사회의 반응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고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베르사유체제’는 유럽 시대의 종말과 함께 미국 시대의 도래를 의미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민소득이 두 배로 증가했고 채무국에서 100억 달러의 채권국이 되었다.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00억 프랑 이상, 이탈리아는 200억 프랑 이상의 부채를 미국에 지게 되었다. 유럽 열강은 공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어 달러에 대한 유럽 화폐의 가치 절하를 초래했던 것이다.³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둘러 연합국에 가담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당초 열강은 일본의 전쟁 참여를 저지하고 중국 영토를 중립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 참전 의지와 홍콩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의 군

2 심호섭, 2013, 「왜 일본 육군은 단기결전, 백병돌격으로 나아갔는가?: 근대 일본 육군의 제1차 세계대전 인식과 대응」, 『군사』 86, 200쪽.

3 김용규, 앞의 글, 212쪽.



미국 대통령, 윌슨

출처: 위키피디아

사력이 필요했던 영국의 협조로, 일본은 독일에 선전포고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은 승전국으로서 영국·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로부터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독일 이권과 적도 이북 태평양 지역의 독일 식민지 등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미국 대통령 윌슨(Thomas W. Wilson, 1856~1924)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독자적 중재로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려고 시도했다. 1917년 1월 22일 그는 상원에서 ‘승리 없는 평화’를 역설했다. 이 선언을 통해 윌슨은 처음으로 그가 전쟁의 근원이라고 말한 유럽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세력균형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윌슨은 미국을 포함한 강

대국이 자발적 억제를 통해 번영할 수 있는 ‘국가들의 공동체’ 구상을 내놓았다. 그 구상은 국가 간 분쟁의 조정 절차, 군비의 대폭 감축,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집단 안보에 의해 지탱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획기적인 이 계획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바로 국제연맹이었다. 이를 통해 윌슨은 현대 세계정치사에서 중대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⁴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 중립을 지키던 미국은 1917년 4월 독일에, 12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선전포고함으로써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이후 연합국의 승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1918년 1월 8일 윌슨은 의회의 연두교서(年頭敎書)에서 14개 항의 평화교섭 조건을 발표했다. 윌슨이 연두교서를 발표하게 된 계기는 러시아혁명 소비에트 정권의 ‘평화선언’이었다.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은 민족자결, 비밀외교의 타파와 공해(公海) 자유의 강조, 법에 의한 지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14개 항목 가운데 다섯 번째 항목인 ‘식민지 요구의 공평한 조정’, 열 번째 항목인 ‘오스트리아 여러 민족의 자결’ 조항이 후일 ‘민족자결주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널리 전파되기에 이르렀다.⁵ 제1차 세계대전은 윌슨이 제안한 14개 항목을 독일이 수락함으로써 마침내 1918년 11월 11일 종식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일본이 승전국의 일원이 됨

4 토마스 J. 녹, 2010, 『우드로 윌슨의 국제주의: 과거와 현재(1919-2009)』, 『3·1운동과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 동북아역사재단, 180~181쪽(원문은 *The Papers of Woodrow Wilson*, Vol.69,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533-539; Thomas J. Knock, 1995, *To End All Wars*, pp.111-115).

5 김용구, 2016,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599~600쪽.

“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일본이 승전국의 일원이 됨으로써
사실상 식민지 ‘조선’의 ‘독립’ 가능성이 멀어졌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으로써 사실상 식민지 ‘조선’의 ‘독립’ 가능성이 멀어졌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파리강화회의와 3·1운동의 전개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19년 1월부터 6월까지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에서 30여 국가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파리강화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원칙은 독일정부가 수락한 윌슨의 14개 항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베르사유조약은 1919년 6월 28일 서명되었다. 이 조약을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성립되었는데, 이를 ‘베르사유체제’로 부른다. 이 무렵 한국인들의 대규모 3·1독립운동 전개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중국의 5·4운동과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등 동아시아의 정세는 급격한 변동을 치렀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는 당시 중요한 이념적 지표가 되어 큰 영향을 끼쳤다.

아일랜드, 발트 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 이집트, 베트남, 한국(조선) 등 7개의 약소민족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의 식민지이거나, 승전국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약소민족이었다. 그러나 이들 약소민족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파리강화회의를 상대로 청원 활동을 펼쳤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약소민족의 진정한 민족자결을 위한 국제사회 정의의 실현이었다. 이들 약소민족의 청원은 패전국의 식민



베르사유강화조약 서명식
(윌리엄 오펜)

베르사유조약은 1919년 6월 28일 31개 연합국과 독일이 베르사유궁전에서 맺은 조약이다. 주로 독일 식민지와 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출처: 위키피디아

지 처리라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나 파리강화회의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었다. 특히 열강이 주도한 파리강화회의는 승전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⁶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파리강화회의에 즈음하여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열강의 동정과 지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특히 파리강화회의 대표 파견을 전후하여 여운형(呂運亨) 등 신한청년당의 선구적 활약으로 도쿄(東京)의 2·8독립선언과

6 장석홍, 2021,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승전국 식민지의 청원서와 그 성격」, 『한국학논총』 5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참조.

“

현실은 냉엄했다.

아시아에서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조선)은
국제사회에서 관심 밖의 일이었다.

”

국내 3·1운동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한편, 국내외에서 각종 민족운동이 고조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국 독립운동에 끼친 커다란 영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했다. 아시아에서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조선)은 국제사회에서 관심 밖의 일이었다. 1919년 3·1운동과 만주(중국 동북지방)·러시아 연해주 무장투쟁 등 한국인들의 거센 저항과 독립운동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더욱 공고해졌다.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식민지 ‘조선’과 해외 한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결국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식민지 ‘조선’ 지배의 중심 세력이 일본 군인에서 관료로 바뀌었고,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일본 정치와 식민지 조선의 연계도 강화되었다.

4. 새 국가 건설 구상과 정부 수립 노력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대한민국’ 선언의 일련의 과정은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이미 19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신민(新民)과 공화제에 대한 구상, 그리고 1910년대의 국제정

세와 그에 근거한 ‘새 국가’, ‘신정부’ 수립운동의 결실이었던 것이다.

1908년 초 결성된 신민회(新民會)는 구국운동 조직인 동시에 당시 쇠퇴해 가던 대한제국의 낙후된 정치·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새 국가’, ‘신한국’, ‘유신(維新)된 자유문명국’을 건설하려는 개혁운동 단체이기도 했다. 그런 신민회의 취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되는 『대동공보(大東共報)』의 「新韓國을 助成하랴면 新民이 되어야 할 일」(1909년 3월 18·22·25일)이란 논설에 잘 집약되어 있다.

이 논설은 “우리가 옛날에 스스로 새롭게 하지 못함으로 악한 나무에 악한 열매를 오늘날 거두었으나, 오늘날에 스스로 새로우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다른 날 거둘 것”이라며 ‘진정한 유신’을 이루기 위해서 ‘새 단체’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 정신’을 불어넣고, ‘새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논설의 내용은 이 무렵 이미 신민회가 공화제 국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에 보인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19년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신민회 회원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따라서 신민회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⁷

이러한 흐름은 대한제국이 멸망한 직후인 1910년 9월 21일 미주에서 발행된 『신한민보(新韓民報)』에 「신한국을 건설호부(建設乎否)」, 그리고 같은 해 10월 5일 자에 「대한인의 자치기관」이란 논설이, 또 1911년 4월 5일 자에 「도선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형한 국가를 먼저 설립할 일」이란 박용만(朴容萬, 1881~1928)의 논설을 통해 더욱 뚜렷이 확인할 수

7 이선민, 2023, 「신민회의 결성 시점에 대한 재고찰」, 『대동문화연구』 12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14~217쪽.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1919년 10월경)
경기도박물관 소장

있다. 박용만의 「무형국가론」 등 논설은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서 해외 한인 교민 등이 주도하는 무형국가, 일종의 임시정부나 망명정부를 제안하여 주목을 끌었던 것이다.

한편, 1914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권업회(勸業會)를 이끌던 이상설(李相高) 등이 중심이 되어 광무 황제(고종)를 망명케 하여 ‘대한광복군정부’라는 망명정부를 구상하기도 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주목되는 사실은 1910년대 중국 남만주(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한 경학사나 부민단, 신흥강습소, 그리고 이들 단체의 맥을 계승한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대한독립군비단, 국민단 등은 이미 공화주의 이념을 지향하고 그러한 방향의 독립운동 기지개척과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 이념을 수용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흐름과

연계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1917년 발표된 「대동단결의 선언」은 1910년대 해외에서 활약하던 신규식(申圭植)·박용만·조소앙(趙素昂) 등 14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上海)에 모여 임시정부 수립을 제안한 선언서라고 할 수 있다. 신규식 등은 국내외 각지에 산재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한 최고기구의 조직과 국민주권설에 입각한 통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민족대회 소집을 제안하는 「대동단결의 선언」과 그러한 대회 소집의 찬동여부를 묻는 ‘찬동통지서’를 국내외 각지에 발송하였다. 독립운동의 최고 통합조직으로 ‘임시정부’를 설립하고자 한 것인데, 이 선언은 그러한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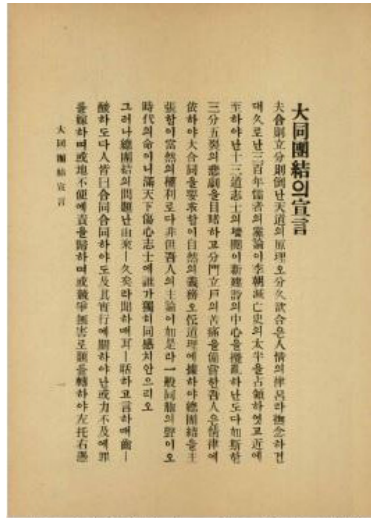
이 ‘선언’의 요지는 주권불멸론에 의한 국민주권설의 제창, 주권을 상속받아 국가적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재정·인물·신용 분야 방안 제시, 국가적 행동을 성취하기 위한 통일기관·통일국가·원만한 국가의 달성이라는 3단계 독립론을 제창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⁸ 이 선언의 계획이 당장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신한민보』 등을 통해 해외동포 사회에 전파되면서 임시정부 수립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선언문은 1919년 3·1운동이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나 러시아 10월 혁명의 영향을 받기에 앞서 한국인들 스스로 대동단결과 최고 통치 기구의 설립을 제의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⁹ 이처럼

8 이 선언의 전문은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7, 『한국학논총』 9, 153~172쪽 참조(원본은 독립기념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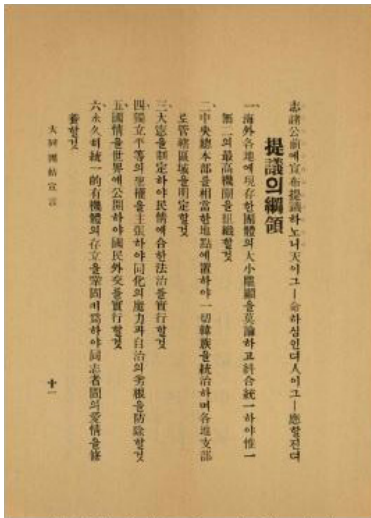
9 조동걸, 1987,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학논총』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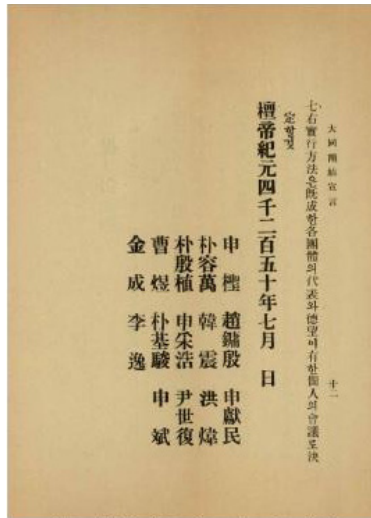
표지



대동단결의 선언



제의의 강령



대표자 명단

「대동단결의 선언」

독립기념관 소장

“

한국인들이 1919년 3·1운동의 거족적 전개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일련의 저항과 독립운동, 민족자결운동을 전개한 것은 이처럼 불리한 국제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이룩한 귀중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

1910년대에 이미 한국인들의 정부 수립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5.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세계사적 의미

제1차 세계대전의 의의는 유럽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미국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에 성공한 러시아, 공산주의 정치 세력의 등장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기는 이 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구미국가들의 관심이 유럽에 쏠려있는 것을 틈타, 일본이 아시아의 현상을 타파하고 제국주의적 욕구를 충족하려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¹⁰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은 동북아시아의 구도를 확연히 변경시켰는데, 중국이 일본 침략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일본의 ‘동북아 경영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¹¹ 그만큼 이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提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

10 성황용, 2001, 『근대동양외교사』, 명지사, 361~362쪽.

11 김용구, 2016,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567쪽.

포커스 II

들이 1919년 3·1운동의 거족적 전개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일련의 저항과 독립운동, 민족자결운동을 전개한 것은 이처럼 불리한 국제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이룩한 귀중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장세운(張世胤, Chang, Se-yun)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독립기념관 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수선사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붕괴의 분수령

조건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명실상부한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서 치른 전쟁이었다.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연합국의 일원이었다. 비록 주요 전선은 유럽 대륙이 었지만 일본이 세력을 팽창하고 있던 동아시아에도 세계대전의 여파는 이어졌다. 일본은 독일이 조차하고 있던 칭다오(靑島)를 비롯하여 중부태평양 일대의 독일령 남양군도(南洋群島)를 공격해 점령했다. 이제 더 이상 청일전쟁 후 3국 간섭에 의해 뒤편을 빼앗기던 ‘애송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침략적 제국주의 정책의 분수령이었다. 연합국의 대열에서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일본은 전후 열강으로부터 군비 감축을 강요받았고 오히려 열강을 주적(主敵)으로 지목하게 되었다. 필연적 역사의 귀결이었지만 당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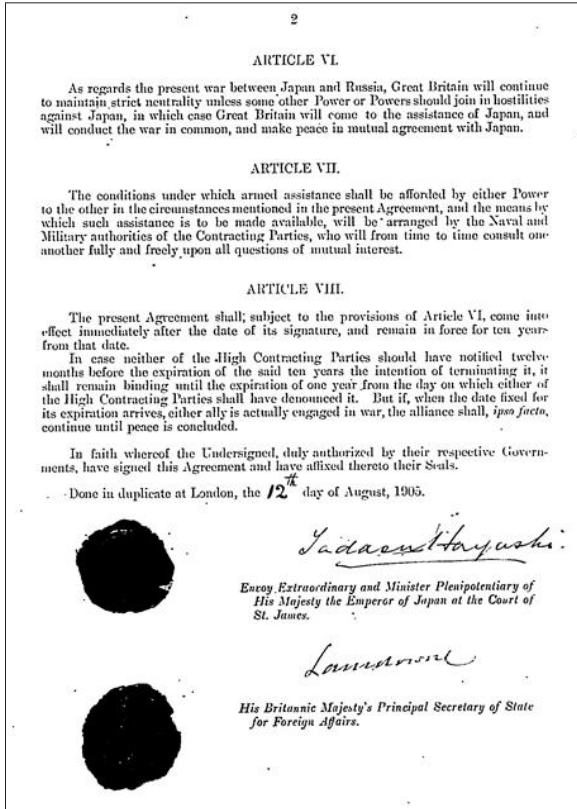
“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침략적 제국주의 정책의
분수령이었다. 연합국의 대열에서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일본은
전후 열강으로부터 군비 감축을 강요받았고 오히려
열강을 주적으로 지목하게 되었다.
”

1. 일본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칭다오 공격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타이완과 한반도를 식민지로 전락시켰으며 중국 대륙의 외연까지 야금야금 잠식해 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영국과 미국 등 서구 열강이었다. 특히 1902년 체결한 영일동맹(Anglo-Japanese Alliance)은 일본이 동북아시아 변방의 ‘섬나라’라는 굴레를 벗게 된 가장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것도 결국 두 차례에 의해 연장된 영일동맹 ‘덕분’이었다.

영일동맹은 최초 체결 이후 1905년과 1911년 두 차례 연장되었다. 1911년 7월 체결된 제3차 영일동맹으로 양국은 견제 대상국을 러시아에서 독일로 변경했다. 개전 초기 영국은 일본의 참전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칭다오를 거점으로 하는 독일 동양함대(東洋艦隊)가 홍콩과 웨이하이(威海)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자 일본에게 독일령 자오저우만(膠州灣) 공격을 요청했다. 공수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던 영일동맹으로 인해 일본은 자동적으로 독일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참전은 단순히 영국의 요청에 의한 것만이 아니었다. 일본은 개전 초기부터 영국 측에 참전 의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었고,



영일동맹 비준서

일본 측 하야시 다다스(林董) 대사와 영국 외상 랜스다운(Henry Lansdowne)의 서명이 보인다. 출처: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www.jacar.go.jp)

실제 일본 해군의 경우 이미 칭다오의 독일군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 방침을 결정하고 상륙 지점까지 설정해 둔 상태였다.

일본군은 1914년 8월부터 중국 내 독일 조차지였던 칭다오 요새 공략에 들어갔다. 당시 칭다오 내 독일 육군 병력은 3,700명이었다. 현지에서 소집한 인원과 군함에서 상륙한 해군을 더해 5,900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머나먼 유럽으로부터의 병력 충원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



칭다오에 상륙하고 있는 일본군(1914)

출처: 위키피디아

일본군 입장에서는 요새를 포위한 채 시간만 끌어도 승리가 자명했다. 그런데 일본군은 포위 항복을 기다리지 않고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다. 가미오 미쓰오미(神尾光臣) 중장 휘하의 독립 제18사단을 중심으로 한 일본군은 압도적인 전력을 앞세워 독일군의 요새를 공격해 함락시켰다. 다만, 무리한 공격이었던 까닭에 피해가 적지 않았다. 독일군이 전사 210명, 부상 550명이었던 데 반해 오히려 일본군은 전사자가 394명, 부상자는 1,458명이나 되었다.

군사사학자인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는 일본군이 무리하게 공격을 감

“
일본군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유는
연합군의 승리나 독일 세력권 점령보다
“열강이 없는 동안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진출’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

행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일본군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유는 연합군의 승리나 독일 세력권 점령보다 “열강이 없는 동안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진출’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2. 독일령 남양군도 점령과 제국의 팽창

동아시아의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적도 이북의 중부 태평양제도 등 태평양 일대에서도 전개되었다. 독일은 장갑순양함 샤른호르스트(Scharnhorst)와 그나이제나우(Gneisenau) 등으로 구성된 동양함대를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과 대서양 일대까지 파견하여 영국의 상선들을 괴롭혔다. 동양함대 소속이었던 2등 순양함 엠덴(light cruiser Emden)은 단독으로 연합군 측 상선 17척을 격침하기도 했다.

일본 해군은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제1·2 남견지대(南遣支隊)와 견미지대(遣美支隊)를 편성했다. 그러나 이들이 공격의 포구(砲口)를 겨누는 곳은 동양함대가 아니었다. 일본 해군 함대는 애초 동양함대를 따라다니며 교전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이 향한 곳은 독일령 남양군도였다. 일본은 태평양의 제해권 확보를 자국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간주하

포커스 II



몰타에 있는 칼카라(Kalkara) 왕립해군묘지 전경과 일본인 사망자 묘역 표지판
지중해에 파견되었다 사망한 일본군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출처: www.findagrave.com/cemetery/2184990/kalkara-naval-cemetery

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찍부터 태평양 일대 도서 선점에 열을 올려오던 차였다. 일본에게 제1차 세계대전은 ‘고유영토론(固有領土論)’이나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 등의 명분 없이도 영토 및 제해권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독일은 1880년대부터 마셜제도(Marshall Islands)를 비롯하여 마리아나 제도(Mariana Islands)의 사이판(Saipan), 캐롤라인제도의 폰페이(Pohnpei) 등을 식민지로 점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비스마르크제도(Bismarck Archipelago)를 포함한 뉴기니섬의 동북쪽까지 점령하여 독일령 뉴기니로 명명했다. 이 중 뉴기니 일대를 제외한 적도 이북의 중부 태평양 일대를 남양군도로 지칭했다.

일본은 독일 동양함대의 움직임을 쫓는 듯 시늉만 하다가 재빨리 드넓은 남양군도를 점령했다. 동양함대와 교전 한 번 치르지 않은 무혈입성이었다. 독일령 남양군도는 비록 영토 측면에서는 보잘 것이 없었으나 작은 섬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미크로네시아(Micronesia: ‘작은 섬들’이라는 뜻으로 중부 태평양 일대와 거의 일치한다)’의 특성상 태평양 일대의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상을 점하고 있었다.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동맹국으로서 연합국을 승리로 이끄는 것보다는 중국 내 자국의 영토 및 이권 확대, 남양군도 점령, 그리고 전후 국제적 발언권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

일본 해군이 교전에 전혀 참여치 않은 것은 아니었다. 영국은 독일 무제한 잠수함작전에 맞서 일본 함대의 지중해 파견을 요청했다. 일본은 3개의 특무함대를 편성해, 인도양과 남아프리카 방면, 지중해 방면, 호주 방면으로 파견했다. 지중해에 파견되었던 제2특무함대는 독일 잠수함과 수십 차례 교전을 거듭했고 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동맹국으로서 연합국을 승리로 이끄는 것보다는
중국 내 자국의 영토 및 이권 확대, 남양군도 점령, 그리고
전후 국제적 발언권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

”

3. 종전과 전후 처리, 국제질서의 변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은 전쟁 중 점령한 중국과 태평양 일대의 통치권을 인정받기 위해 힘썼다. 일본은 1919년 체결된 베르사유조약(Treaty of Versailles)을 통해 칭다오에 대한 지배를 강화했다. 남양군도는 국제연맹으로부터 위임통치를 인정받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외연은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넓어진 외형과 달리 국제정세는 불리하게 변모해 가고 있었다. 변화를 불러온 요인 중 첫 번째는 전쟁 중에 일어났던 사회주의 혁명으로 러시아가 붕괴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열강에 의한 군축 요구였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대외정책도 변경되었다.

일본은 전후 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를 재정립하려는 의도에서 열린 워싱턴회의가 자국의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으로 여겼다. 워싱턴회의 결과 1922년 미국·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5개국 간 해군군축조약이 체결되었고, 미국·영국·일본 등 3국 사이에는 태평양방비제한조약이 조인되었다. 해군군축조약은 미국·영국·일본 등의 해군 규모를 배수량 기준 5:5:3의 비율로 제한한 것이었다. 아울러 태평양방비제한조약은 태평양 일대 도서 지역에 대한 군사적 방비를 1921년 말 현재 상태로 유지토록 한 것이다. 이 중 군축의 주요 목적은 전쟁 중 급속도로 팽창한 일

“

일본 군부의 침략적 야망과 군사적 도발로 인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기 파종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기나긴 침략전쟁의 길로 빠져들었다.

”

본에 멩에를 지우기 위함이었다.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의 가상 적국은 늘 러시아, 미국, 중국 순이었다. 그런데 워싱턴회의와 그에 따른 제반 조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923년 2월 일본은 제국국방방침 개정을 통해 가상 적국을 미국, 러시아, 중국 순으로 변경하였다. 일본 육·해군 모두 제1적국으로 미국을 상정하게 되었다.

워싱턴회의는 기존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틀이었던 영일동맹체제도 해체시켰다. 미국은 태평양 일대에서 영국이 일본과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느꼈다. 만약 영일동맹이 유지된 채로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게 될 경우 미·영은 갈등 관계에 놓이는 형국이었다. 영국 역시 러시아가 붕괴된 상황에서 일본의 가치가 하락했고 재정 상태도 악화되어 더 이상의 동맹조약을 반기지 않았다. 결국 일본이 서구 열강과 맺은 군축과 방비제한조약 등으로 인해 영일동맹은 실효를 다했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전쟁 중 연합국 대열에 함께 했던 미국·영국과 균열을 보였다. 열강으로부터 군비 감축을 강요받는 상황은 제정 러시아의 붕괴와 맞물려 일본에게 미국을 제1적국으로 만들었다. 영국과의 오랜 동맹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 일본 역시 평화와 군축의 흐름 속에서 한 때 반군국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포커스 II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군부의 침략적 야망과 군사적 도발로 인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기 파종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기나긴 침략전쟁의 길로 빠져들었다. 일본이 독일로부터 점령한 남양군도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조건(曹健, Cho, Geon)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동국대학교에서 한국근현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위원회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제1차 세계대전과 중국의 서양 인식 변화

이한결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1. '현대의 기점'이 된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7월에 일어나서 1918년 11월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은 종래의 어떤 전쟁보다도 큰 규모의 전쟁이었다. 4년이 넘게 벌어진 이 전쟁이 끝난 시점을, 서양에서는 '현대'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말한다. 전쟁이 끝나면서, 기존의 몇몇 강한 나라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국제관계가 대등한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관계로 전환되었고, 국제사회의 구성단위가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에서 국민국가로 바뀌었으며, 정치에서는 전통적 엘리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대중적 정치지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현대적인 대중정치와 대중사회 형성이 시작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현대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세계대전'이라고 말하면 제2차

“
근대 중국사에서 최초의 대중운동인 5·4운동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세계사적 사건인 제1차 세계대전이
단순히 대중운동의 전사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

세계대전을 연상하는 경향이 많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는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국과 일본이 ‘참전’하기는 하였으나, 전쟁의 피해가 제2차 세계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전쟁의 당사자라는 의식이 약한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1919년의 5·4운동을 중국 현대의 기점으로 여겨왔는데, 5·4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에서 현대의 기점을 1919년으로 여기는 것은, 마오쩌둥(毛澤東)이 『신민주주의론』(1940)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뒤처리를 위한 파리강화회의의 결과로 일어난 5·4운동을 중국에서 노동자계급과 공산당이 탄생한 계기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최근까지도 중국의 공식적인 시대구분 설정에 지침이 되었다.

근대 중국사에서 최초의 대중운동인 5·4운동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세계사적 사건인 제1차 세계대전이 단순히 대중운동의 전사(前史)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1910년대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전쟁을 거치면서 근대중국의 서양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2. 군사력을 매개로 한 서구 근대와 중국의 관계

중국은 오랫동안 화이(華夷)사상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중심을 자부해왔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는 중화(中華)라는 관점에서 서양은 ‘먼 곳의 오랑캐’인 원이(遠夷)가 되었으므로, 서양문명의 수준은 중국에 비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근대 이전에 서양이 중국에 접근한 주된 목적은 기독교 선교에 있었는데, 화이질서가 공고한 중국은 이와 같은 질서체계에 서양이라는 이질적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줄곧 거절해왔다. 물론, 명나라 말기에 들어온 마테오 리치와 아담 샬로 대표되는 서양의 자연과학 분야 지식은, 일부 중국 지식인에게 각광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제한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인 것에 그쳤고, 중국 지식 전반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서양의 접근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변화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제1차 아편전쟁(1840~1842)에서 패배한 이후, 웨이위안(魏源, 1794~1857)이 편찬하여 1843년 초판을 간행한 세계정세에 관한 지리지 『해국도지(海國圖志)』이다. 책의 서문에는 ‘이(夷)의 장기’인 서양의 군비와 군사 훈련법을 받아들여 서양의 침략에 대항하고자 하는 ‘사이론(師夷論, 서양을 배운다)’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서양을 경시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제2차 아편전쟁(1856~1860)에서 패배한 청은 오랑캐와의 교역에 관한 업무를 의미했던 ‘이무(夷務)’라는 단어를 서양 국가들과의 외교업무를 의미하는 ‘양무(洋務)’로 바꿨다. 이후 중국은 1860년대부터 30여 년에 걸쳐 서양과 동등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 양무운동을 진행했다.

청일전쟁(1894~1895)에서 패배한 청은 똑같이 서양의 군사력을 도입하

“

중국은 19세기 이래 서구 근대의 군사력에 의해
패배를 경험할 때마다 서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나갔다.

”

였음에도 일본과 격차가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이로 인해 양무운동 시기 동안 서양을 수용하는 기본적인 자세였던 ‘중체서용(中體西用)론’을 넘어 서는 중국 제도의 전반적인 변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서양의 연합 세력에게 전면적으로 패배하여 베이징이 함락된 의화단사건을 겪은 이후, 청조의 마지막 10년 동안 중국에서는 급속한 정치·사회제도의 서양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국은 19세기 이래 서구 근대의 군사력에 의해 패배를 경험할 때마다 서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나갔다.

3. 중화민국 공화정의 위기와 ‘유럽 전쟁’의 여파

1912년 1월에 수립된 중화민국은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을 표방했으나, 새로운 정치체제는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중화민국 임시약법에 의해 치러진 1913년 2월의 제1회 국회 선거에서 국민당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으나,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었던 쑹자오런(宋教仁)이 상하이에서 암살당했다. 쑹자오런의 암살을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사주한 것이라 여긴 쑨원(孫文) 등의 국민당 계열은 위안스카이에 대한 제2혁명을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같은 해 10월에 국회에서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대통령에 취임한 위안스카이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켜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일본의 5개국 은행에서 2,500만 파운드의 차관을 국회 동의 없이 무단으로

빌리며 중앙집권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

1914년 7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중화민국정부는 8월 6일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전쟁을 계기로 중국에서 권익확대를 도모한 일본은, 영일동맹을 근거로 하여 8월 23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1914년 9월 일본은 독일이 권익을 가지고 있던 산둥(山東)반도를 공격했는데, 11월에는 칭다오(靑島)와 산둥철도까지 점령하며 승리했다. 1915년 1월 18일 일본은 산둥에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익과 남만주와 동부 몽골에서 일본의 우선권 등의 21개 조항을 중국에 요구했다. 위안스카이는 일본의 요구를 피해 보려 했으나, 결국 그 태반을 5월 9일에 수락했다. 일본의 21개조 요구는 해외 화교와 국내 도시부의 상인단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격렬한 반대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집회를 통한 선전활동, ‘애국저금’운동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위기감을 느낀 위안스카이는, 더욱 강력한 정권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고자 했다. 1915년 12월 11일에 국회를 대신하여 설치한 참정원에서 위안스카이를 황제로 추대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1916년 1월 1일부터는 홍헌(洪憲)이라는 연호의 황제체제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국내 여러 세력이 반발하고 일본·영국·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 등 열강이 황제체제의 실시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위안스카이는 황제체제를 취소했고, 얼마 후 6월에 사망했다. 지도자를 잃은 베이징 중앙정부의 권위는 하락했고, 이후 중국에서는 1920년대 후반까지 군벌들에 의한 군사항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4. 제1차 세계대전과 중국의 서양관 변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부터 중국의 언론매체는 전쟁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청말 이래 급격하게 증가한 각종 신문과 잡지들은 이 전쟁의 경위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전쟁 초기에는 대규모의 전쟁을 통해 발생하는 전쟁의 참상에 대한 비판보다는 유럽의 전쟁을 통해 나타나는 서양문명의 특징에 대한 언급이 다수 나타났다.

상무인서관의 『동방잡지(東方雜誌)』는 중국의 언론매체 가운데에서도 전쟁에 관해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전파했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이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두야취앤(杜亞泉)은,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발표한 「대전쟁과 중국」에서 “이번 대전쟁이 우리 중국과 관계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 민족의 자각심을 환기시킨 점이다. 이것이 비록 간접적인 영향이라 하더라도, 우리 중국이 10년 내에 겪은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라며, 청말 이래로 겪은 어떤 전쟁보다도 이번 전쟁의 의의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야취앤은 이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서구의 국가들이 대규모의 전쟁을 통해 평화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국주의적인 각축에서 탈피해나갈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침체되어있는 중국도 세계적인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두야취앤은 본래 수학·화학 등의 서구식 자연과학 전파에 힘썼으며 서구 근대 학습을 중요시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질문명을 중심으로 발전한 서구문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10년대 중후반 중국의 사상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은 신문화운동이다. 1915년 9월에 상하이에서 창간된 『신청년』과 베이징대

“

“이번 대전쟁이 우리 중국과 관계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 민족의 자각심을 환기시킨 점이다.
이것이 비록 간접적인 영향이라 하더라도,
우리 중국이 10년 내에 겪은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

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 문화쇄신운동은 중화민국이 수립된 이래 중국의 정치적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반성하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되면서 『신청년』의 지면에는 중국사회가 적극적으로 서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나타났다. 잡지를 창간하고 스스로도 많은 논설을 쓴 천두슈(陳獨秀)는 중국의 현재 상황을 비판하면서 전쟁에서 독일이 분투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고, 『신청년』 1916년 1월호에 실린 「1916년」에서 “여러 나라들은 독일의 강성함의 근원을 고찰하고, 전력을 기울여서 공업·화학에 힘쓰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아 1916년 유럽의 형세, 군사, 정치, 학술, 사상은 이번 전쟁의 세례를 받아 반드시 격변하고 그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양은 전쟁을 통해서도 그 진보성을 증명한다는 주장은 다분히 과격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신문화운동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주장과 함께 중국사회를 전면적으로 서양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의식이 청년층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갔다.

5. 중국의 참전과 전쟁의 종결

제1차 세계대전의 장기화는 유럽의 각국에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었다. 장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젊은이들의 징집이 계속되자, 각국 사회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식민지 주민, 전쟁포로 등을 동원하였으나, 이것으로는 노동력을 충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중립국인 중국으로부터 노동력을 들여오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1916년 중반 이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영국과 프랑스에서 약 14만 명, 러시아에서 약 20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했고, 이들은 항만노동, 임업과 광업의 노동, 철도 건설, 군수공장의 노동, 전선에서 참호파기 및 시체 매장 등 다양한 장소와 분야에서 노동에 종사했다. 이러한 형태로 중국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해외의 노동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전쟁에 공헌하여 전후 강화회의에서 발언권을 획득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1917년 3월 14일, 중화민국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독일과 외교관계를 끊었고, 같은 해 4월 6일 미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에서는 정식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참전파와 참전 반대파로 나뉘었는데, 국무총리 단치루이(段祺瑞), 저명한 계몽지식인이자 정치인인 량치차오(梁啟超) 등이 찬성파였고, 반대파에는 단치루이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대총통 리위안홍(黎元洪)과 국민당의 많은 국회의원 등이 있었다. 두 세력은 참전문제를 두고 몇 달간 대립했으나, 최종적으로 참전파가 주도권을 장악하여 1917년 8월 14일에 중화민국은 정식으로 독일·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했다. 이로써 중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했으며, 실질적인 전

“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서구 근대와의 접촉 이래 중국은
처음으로 승전국이라는 지위를 경험했고,
전쟁 기간 동안에는 서양문명에 대한 관점이 다양해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서양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

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노동력과 물자 제공이라는 형태로 전쟁에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연합국과의 교섭을 통해 의화단 배상금 지불의 연기, 수입 관세의 인상 등 일정 정도의 외교적 이익을 얻기도 했다.

독일의 항복으로 1918년 11월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은 중국이 서구 근대와 조우한 이래 처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전쟁이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중국에서는 이번 전쟁이 ‘강권(強權)에 대한 공리(公理)의 승리’라는 말이 유행했다. 중국이 포함된 연합국은 공리(정의)의 측에 섰으므로, 강권(폭력)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던 독일에게 승리한 것이라는 이해가 확산되었다. 전쟁에서 연합국이 승리한 것은 군사력의 우위만이 아닌 정의로운 이념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시한 ‘14개조 평화 원칙’에 대한 중국인의 열렬한 지지가 있었다. 윌슨이 강조한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에 대한 공감과 지지는 전후 강화회의에서 산둥문제의 해결과 함께 불평등조약의 개정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가 개시되자 중화민국에서는 5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전쟁 중에 있었던 일본의 21개조 요구의 무효성과 서구와 맺은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미국·프랑스 등의 서양 측은 아시아의 현상유지에 무게를 두었고, 산둥권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 소식이 들리자 중국 각지에서는 베르사유조약 조인을 반대하는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이는 같은 해 5월 4일 베이징에서 일어난 시위를 시작으로 중국 전역의 반일 시위로 이어졌다.

6. 중국 근대사에서 지니는 의미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서구 근대를 수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19세기 후반 이래 서양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편입된 중국은 서양의 군사력을 경험할 때마다 망국의 위기를 피부로 느꼈고, 서양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서구 근대와의 접촉 이래 중국은 처음으로 승전국이라는 지위를 경험했고, 전쟁 기간 동안에는 서양문명에 대한 관점이 다양해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서양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서양에서 중국이 능동적으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서양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1920년대 이후, 국제연맹 가맹국이라는 실질적인 지위와 함께 중국이 국제사회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바탕이 되었다.



이한결(李한결, Lee, Han-gyul)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일본 교토대학 문학연구과에서 중국근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구 분야는 중화민국 초기~중기의 정치사상사이며, 해당 시기에 언론계에서 활약한 지식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신해혁명 이전 입헌파에 속해 있던 지식인들이 1910년대에 보인 정치의식에 대해 연구 중이다.

산둥반도에서 바라본 제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

안재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제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 근대사

제1차 세계대전은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1차 세계대전이 미친 사상적인 변화가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할 것이다. 종전 후 미국 대통령 윌슨(Thomas W. Wilson)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이 동아시아에도 밀려와,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3·1운동, 중국에서 일어난 5·4운동 등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운동이 확장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1차 세계대전을 수습하고자 했던 국제적 노력이 유럽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펼쳐졌지만, 불완전한 체제의 구축에 그쳤고 이러한 모순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근현대 동아시아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이 동아시아에 미

* 편집자 주: 이 글에 들어간 밑줄은 필자가 강조한 것이다.

친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도 이러한 공감대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칭다오(靑島)에 위치한 ‘칭다오1차대전유적박물관(靑島一戰遺址博物館)’과 웨이하이(威海)에 위치한 ‘1차대전중국인노동자기념관(一戰華工紀念館)’은 중국 사회에서 1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들 전시는 1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독특한 중국의 시선과 함께, 여전히 존재하는 근대사 인식상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들의 고민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2. 칭다오1차대전유적박물관

산둥반도 남쪽에 위치한 칭다오는 1차 세계대전 시기 중국 내에서도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했던 지역이다. 1898년부터 독일의 조차지가 되어 독일의 통치하에 놓였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은 이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독일로부터 빼앗았다. 그리고 일본은 유명한 21개조 요구를 통해 칭다오를 포함한 산둥 지역 전체의 이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1922년 칭다오를 비롯해 일본이 접수한 산둥반도 지역의 이권은 중국에 반환되었다.

독일에 의한 식민지화, 일본에 의한 점령, 전쟁 종료 후 중국에 반환되는 등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겪은 칭다오시는 1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먼저 박물관을 들어서면 전시실 앞에 서문이 눈에 띈다. ‘도시의 흥망성쇠는 국가 운명의 축소판입니다’라는 말을 서두에 꺼내면 서, 칭다오가 독일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가 되었던 사실, 1차 세계대전

“

독일에 의한 식민지화, 일본에 의한 점령, 전쟁 종료 후
중국에 반환되는 등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겪은 칭다오시는
1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

시기 ‘극동 유일의 전쟁터’가 된 점 등을 짚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시가 ‘칭다오 복귀의 우여곡절을 되돌아보고, 중국 인민의 위대한 기상을 계승 발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꾸며졌음을 말한다.

전시관을 들어서면, 독일의 칭다오 점령, 식민 통치 시기, 1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과 일본의 전쟁, 일본의 산둥반도 점령, 종전과 파리강화회의, 칭다오 중국 복귀에 관한 내용이 동선에 따라 순서대로 게시되어 있다. 독일이 1897년 병력을 파견해 산둥반도 남쪽의 자오저우만(膠州灣) 일대를 점령하고, 이 지역의 주요 거점인 칭다오를 식민지로 삼았으며, 이후 독일은 칭다오를 ‘동아시아에 대한 패권 경쟁을 위해’ 이 지역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사진1). 그러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승리하면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세력으로 성장한 일본은 ‘산둥성에 자리잡은 독일을 전략적 경쟁자’로 여겼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은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자오저우만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중국 인민을 전쟁의 나락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사진2).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칭다오를 점령하고, ‘21개조 요구’를 중국에 강요하여, 산둥반도 전체의 이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 인민이 칭다오 반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 간 갈등으로 가득한 국제정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칭다오의 주권을 어렵게 되찾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체험! 역사현장



사진1 독일의 식민 통치기를 보여주는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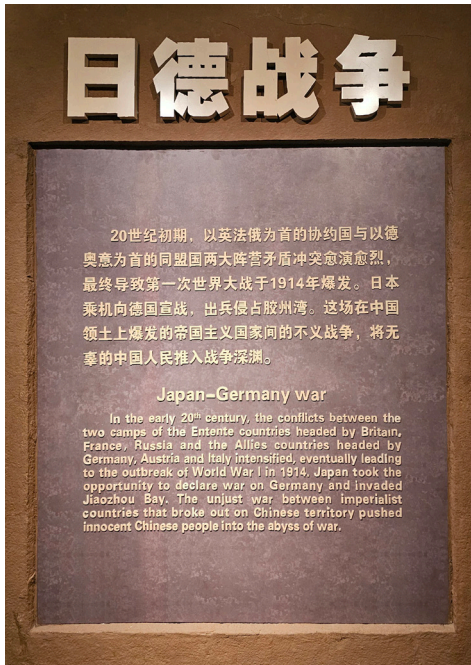


사진2 일본-독일 전쟁 설명문

“

눈에 띄는 점은, 1차 세계대전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전쟁에 중국이 연합국으로 참전했으며,
당당한 승전국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있는 서술이다.

”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오히려 눈에 띄는 점은, 1차 세계대전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전쟁에 중국이 연합국으로 참전했으며, 당당한 승전국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있는 서술이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이 지지하는 가운데 완치루이(段祺瑞)정부는 중국이 연합국에 합류해서 독일에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4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군대를 대신해 노동력으로(以工代兵)’ 유럽 원정에 나섰고, 중국은 일정한 국제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동맹국이 최종 패배함에 따라, 중국은 근대 역사상 첫 번째로 전승국이 되었고, 국제연맹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습니다(사진3).”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917년 8월, 중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지만, 실제 전투에 참여한 사례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군대를 대신해 노동력으로(以工代兵)’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이 박물관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전시 노동에 종사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14만 명에 달했고, “전쟁에 참전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자신을 계발했으며, 고난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시 노동에 종사한 중국인 노동자의 노력을 “조국이 승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피와 목숨을”(사진5) 바친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사진 4).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칭다오를 식민지로 빼앗기고, 열강끼리의 전쟁

체험! 역사현장



사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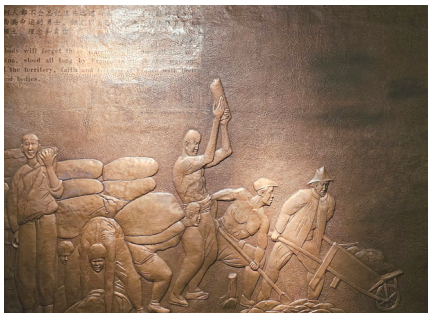


사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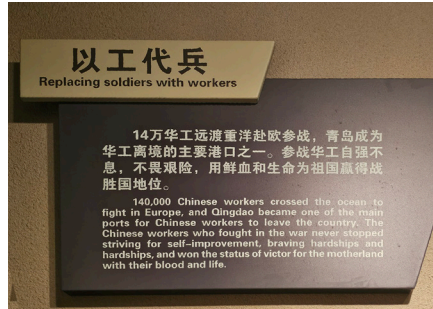


사진5



사진6

사진 3~6 1차 세계대전 시기 유럽에서 일한 중국인 노동자들

에 의해 무고한 중국 인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시적인 설명과 14만 명의 중국 노동자가 유럽으로 향해 전시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연합국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고, 중국은 전승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두 가지 설명은,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침탈’과 ‘전승(戰勝)’이 같은 시기에 공존했다는 설명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두 가지 가운데 칭다오1차대전유적박물관 측이 선택한 것은 ‘침탈’의 강조라 이해할 수 있다. 종전 후 일어난 전 사회적인 운동인 5·4운동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국주의가 지닌 약육강식적 강도 행위는 중국 인민을 각성시켰습니다. … 5·4애국운동은 중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되었고, 중국 인민은 반제 반봉건 신민주주의 혁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사진6).” 부당한 외세의 침탈에 대해 당시 중국 인민이 각성하여 새로운 길을 택했다는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다. 칭다오1차대전유적박물관은 칭다오 지역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을 전후하여 어떠한 역사적 경험을 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중국 사회 전체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시달렸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인민이 단결하여 새로운 사회 변혁을 추구했다는 거시적인 역사관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3. 웨이하이 1차대전중국인노동자기념관

‘전승’의 기억으로서 1차 세계대전을 설명하는 방식은 웨이하이에 있는 1차대전중국인노동자기념관에서도 반복된다. 중국인노동자기념관을 들어서면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서문에는, ‘이 전쟁 기간 동안 14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유럽으로 징집되어 제1차 세계대전 서부전선 전장에 참

전했습니다. 그들은 연합국의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칭다오의 칭다오1차대전유적박물관과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노동자기념관의 전시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모집에서부터 이동, 유럽에서의 노동, 전쟁 종료 후 복귀를 보여주는 순서로 진행되고, 가장 마지막에는 1차 세계대전이 동아시아 지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며 끝난다. 이곳의 전시에 따르면, 웨이하이는 1916년 중국인 노동자를 연합국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후, 노동력 모집과 송출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웨이하이가 거점으로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영국은 중국 북부 웨이하이 조차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화북 지역에서 중국 용병을 양성하고 노동력을 모집한 선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희 인프라가 많고 기타 유리한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사진7).

웨이하이에서 모집된 노동자들은 선박을 통해 바다를 건너 멀리 유럽까지 이동했고, 유럽에 도착한 중국 노동자들은 '포격이 쏟아지는 전장에 노출되어, 현대 기술을 배우고 무기를 조작하며, 힘들고 위험한 육체 노동에 참여하는 등 전선과 후방 모든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참호 파기, 요새 건설, 현장 구조, 현장 통신, 시체 수습, 지뢰 제거, 도로 및 교량 건설, 식량과 건축 하역, 보급품 선적, 무기 제조, 산림 벌목, 광산 채굴 등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했다고 한다. 벨기에와 프랑스 북동부 등 전선 근처에서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등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 중국인 노동자들은 독일의 항공기 폭격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그들의 희생은 '연합국의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설명되어 있다(사진8, 사진9).

체험! 역사현장



威海卫华工营内等候体检的华工 (摄于1917年)
Chinese laborers waiting for physical examination in Weihai Port Chinese Laborers Camp (photo taken in 1917)

由于当时威海不通铁路, 外地报名者经目测合格后, 便由官方安排经胶济铁路至青岛, 再乘船转往威海体检。
Since Weihai was not connected to the railway at that time, after the applicants from other places passed the visual inspection, they were arranged by the British side to go to Qingdao via Jiaoji Railway, and then transferred to Weihai by boat for physical examination.



哈里·利文斯顿上尉为华工体检
Captain Harry Livingston Examining Chinese Laborers

各地应招华工年龄在20-40岁之间, 以农民为主, 也包括部分技工、教师、文员等, 但大多目不识丁。英法对所招华工身体素质要求相当高, 其体检严格程度如同英法的新兵入伍检查, 淘汰率有时高达80%。
The age of the Chinese laborers recruited from all regions was between 20-40 years old. There were mainly farmers, including some technicians, teachers, clerks, etc., and most of them were illiterate. Britain and France had quite high requirements for the physical quality of the Chinese recruits. Their physical examination was as strict as that of British and French recruits. The elimination rate was sometimes as high as 80%.



华工接受种痘
Chinese laborers receiving vaccination



招工局军医对华工进行体检, 其中一项是筛查沙眼。
Military doctors of the Recruitment Bureau conducted physical examinations of Chinese laborers, one of which was trachoma screening.



通过体检的华工拍照存档, 他们手中的牌子上写有自己的编号。
Photos of the Chinese laborers who passed the physical examination were taken and documented. The sign in their hands had their own number written on it.

사진 1차 세계대전 시기 중국인 노동자 모집과 관련한 기록 사진



사진8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중국인 노동자 모습을 재현한 전시물



사진9 중국인 노동자들이 포탄의 탄피를 활용해서 만든 공예품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왔으나, 약 3,000명 정도가 현지에 남는 선택을 했고, 잔류 노동자들은 특히 프랑스에 많았는데, 이들은 프랑스에 정착한 중국인 이민 1세대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이 중국인노동자기념관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1차 세계대전 시기 유럽에서 어떤 활약을 보였는지를 설명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명을 덧붙였다.

“

연합국들은 중국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았고,
중국인들은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5·4운동과 같은 대규모 운동이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

파리강화회의에서 중국은 승전국의 지위에 서서, 독일이 산둥에 대해 지니고 있던 권익을 회수하고자 했으나 연합국은 이를 일본에게 넘겨주었다.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5·4운동이 일어났고, 중국 인민은 각성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1차 세계대전 시기 중국은 승전국이었고, 유럽에 파견된 중국인 노동자들은 이러한 승리에 기여했지만, 연합국들은 중국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았고, 중국인들은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5·4운동과 같은 대규모 운동이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중국인 노동자의 활약이 5·4운동과 연결된다는 설명이 학문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잠시 접어 두고, 앞서 소개된 칭다오1차대전유적박물관의 5·4운동에 대한 설명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유사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 칭다오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탈과 이에 대한 중국 인민의 역사적 대응(5·4운동)을 강조하는 방식은, 웨이하이 지역에서 유럽으로 향해 전시 노동에 종사한 중국인 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1차 세계대전에 관한 동일한 거시적 관점을 드러내는 방식은 대단히 닮아 있다.

4.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칭다오의 칭다오1차대전유적박물관, 웨이하이의 중국인노동자기념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지금의 중국 사회가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대해 일본과 독일 등 제국주의 국가가 중국을 ‘침탈’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중국 인민 전체에 의해 이루어진 때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중국정부가 발간한 교과서[『중외역사강요(상)』, 인민교육출판사, 2023(2019 검정), pp. 177-123]에 드러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시각과도 일치한다. 중국인 노동자들의 막대한 공헌이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했고, ‘중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후 충분한 권익을 보호받지 못했으며,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5·4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중국 인민들이 국가를 위협에서 구하고 존엄을 수호하며 민족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시작한 위대한 사회 혁명 운동’이었다는 설명이다.

5·4운동이 중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이 심대했으며, 현재의 중국에까지 그 영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와 박물관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같은 해석이 지니는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1차 세계대전이 지닌 영향의 다면성과 관련된 점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차 세계대전이 미친 영향은 동아시아 지역에만 한정하더라도, 위싱턴체제의 성립과 같이 비록 뚜렷한 한계를 지녔고 실패로 끝났다고는 하나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었던 큰 변화가 존재했으며, 총력전 개념의 도입이 미친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화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사상적 측면에서 민족주의가 심화되고 사회주의 계열의 주장이 확산되

체험! 역사현장

는 등 다양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성격만을 띤 것은 아니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동아시아 사회 전체와 개별 국가들을 해석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다면적, 다층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온전히 열강의 중국 침탈과 그에 대한 중국 인민의 대응만으로 국한시켜 설명하는 것은 20세기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안재익(安宰燧, Ahn, Jae-ik)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 근현대사, 동아시아 외교사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미일 교섭의 개시-미일 양해안의 성립과 미 국무부 관료들의 대응」(『동양사학연구』, 2021), 「미일 통상 항해조약의 폐지와 미 국무부의 극동 정책 전환」(『미국사연구』, 2022), 「전헌체제(典憲體制)의 운용과 원로(元老)의 정치적 활동: 다이쇼(大正) 후기 섭정(攝政) 설치 문제를 중심으로」(『일본역사연구』, 2022)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1호 2024 겨울

발행일 2024년 12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박지향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차재복
편집위원 박한민, 이동욱, 이유표, 전영욱, 조윤수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39
팩스 02)2012-6154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매콤

ISSN 2950-9696